



Contents

권두언	도랑에서 서해까지 - 모든 도랑은 서해로 흘러든다. _허재영	02
특집	'도랑에서 서해까지' 충남의 하구생태복원 의지와 열정 금강의 오염 관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_정복영 06 높은 가치의 서해연안 생태관광 _이인배 12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통한 충남 수산업 활성화 방안 _황선도, 손성규 18	
충남논단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_최영화 30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극복을 위한 충청남도의 수자원 활용방향 및 과제 _김영일, 정우혁 39 충남 전통시장의 또 하나의 기회,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_이상준 48	
충남마을	색다른 사계절을 품은 칠갑산 알프스마을 _정봉희 56	
열린마당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년, 아쉬움 속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며 _이상신 64 응답하라, '시골' 환경운동연합! _신은미 72 사회적기업가로서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들 _최영준 78	
해외리포트	일본의 중소도시 지역개발 정책: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추진 현황 _임형빈, 이상준 85	
상생+협력	갈등관리와 인정조정관 제도 _정창화 92	
오피니언	충남 경제비전에 거는 기대 _오정연 100	
충남소식	102	
연구원 소식	107	
문화유산	김장생 문묘배향 교지 113	

도랑에서 서해까지

모든 도랑은 서해로 흘러든다



허재영 _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장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모든 자연이 그렇듯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것로부터 비롯하여 큰 것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로 시작하여 생명체는 먹이사슬의 형태로 이 세상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물은 본질적으로 순환(hydrologic cycle)이다. 도랑에서 시작하여 하구로 집중되어 바다와 연결된다. 결국 모든 도랑은 바다로 흘러든다. 바다는 증발과 강수를 통하여 질량의 균형을 이루며, 육지로부터 담수와 영양물질과 토사를 공급받아 생물학적·지형적 균형을 갖추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랑은 곧 바다이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순환의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다.

금강을 비롯한 많은 하천이 조절(control)의 개념으로 정비되어 왔다. 치수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인데, 홍수의 피해를 막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하천을 정비해왔다. 그러나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 현상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 분야의 기술자들은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 100%에 가까운 국가하천의 정비율과 90%에 가까운 지방하천의 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40년만의 가뭄에도 견디기 어려워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은 하천(수자원)은 본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2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한 4대강 사업의 결과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부분적인 성공에 머물러 있어서 물 관리정책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충남의 서해안은 지금까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지만, 지형적인 면에서나 지정학적인 면에서, 또한 해양생태계의 면에서 충남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아름답고 화려한 리아스식 해안의 경관, 깨끗하

고 질 높은 갯벌의 무한한 생명력, 인간 친화적인 완만한 해변(海濱), 풍부한 어족자원, 어촌의 투박하지만 여유로운 풍경, 바다를 지키려는 어민들의 절실한 노력, 고통을 이겨내려는 사람과 환경의 조화 등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자원이다.

그러나 서해안에는 농지 조성을 위해 다수의 간척사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농업용수의 확보에 필요한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279개(전국의 방조제는 1,611개에 이르는데, 이것의 17.3%에 해당한다)의 방조제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해 가치가 큰 자연해안선이 너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눈앞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해안이 갖는 더 큰 가치를 훼손해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두었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회복력이 떨어진 자연환경의 복원을 시도해야 할 시기이다. 금강비전과 그 시행계획은 금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금강분류와 금강으로 유입하는 지천 및 그 유역을 생명력이 있는 자연공간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언이고 실행계획이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도량을 겹쳐서 하천 유역도를 그려보면 물길의 아주 섬세한 조직이 보인다. 도량은 싹뿔과 같아서 하천과 그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조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싹뿔이 건강하지 않으면 생명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도량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천망(網)도 건강할 수 없다. 치수, 이수, 하천환경의 모든 면에서 도량부터 건전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마치 먹이사슬에서 무기물이나 기초생산자(basic source of food)로부터 시작되는 각 단계가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천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은 하천관리 정책의 방향을 자연생태 기능의 회복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생태적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까지 부족하며, 복원 구역의 위상이나 목적도 모호하다. 생태적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유황(하천유량의 변화), 하도, 모래톱, 육지부와의 횡적 연결성, 기수역 등의 복원이 필요한데, 각종 보, 하천을 따라 조성된 제방, 자동차 도로, 자전거 도로 등 물의 종적, 횡적 흐름을 가로막는 구조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하천유황이나 모래톱의 복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목표로 된다.

충청남도 서해연안에 위치한 하구는 61개소이다. 하천의 하류지역에 방조제, 하굿둑, 배수갑문, 보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열린 하구는 6개 하천에 불과하다. 건강한 하구호의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개발행위가 향후에 후손의 요구나 삶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의 하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하구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하구의 고유한 환경기능과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상류 하천에서 연안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하구관리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 단체, 법률, 비용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즉 분화된 현행관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하구지역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가치의 분석을 토대로 현명한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더 이상 하구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과 동시에 심각하게 훼손된 하구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하구역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단힌 하구와 갇힌 하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구의 물리적, 화학적, 생태학적 특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통해 하구호의 해수순환과 생태복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오염된 하구호의 수질개선 없이는 생태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순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규모 복원보다는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복원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되, 충남에 적합한 하구복원기법의 개발과 추진절차의 확립도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서 표준기법과 절차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과 연안의 보전과 활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연의 필요보다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하천 및 연안관리로 인해 파괴되었던 생태계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수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 계획·집행·유지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생태계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들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 하구 및 연안을 지속가능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역과 연안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천 및 연안을 공유하는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정보, 관점, 지식, 지혜를 공유하고, 각자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설명·설득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공통된 비전을 도출하고 그 비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된 가치를 뒷받침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 단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거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재정,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자연과 사람의 공생을 도모하여야 한다. 공유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자원이 갖는 자연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천과 연안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자연생태, 경관 등은 지역의 발전을 매개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생태 및 경관의 보전이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안 및 하구의 생태복원은 수문학적 순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물의 흐름을 정상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하천을 통해 흘러 나가는 물, 물질, 에너지의 순환 체계가 무리 없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 순환경제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산기술과 생산기반을 토대로 자립적인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산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며, 역내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 지역에 머물지 않는 관광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지역에서 사람이 떠나게 만들 것이므로 하천과 연안의 관리 및 개발의 편익이 지역사회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생물의 다양성을 회복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의 감소 요인은 서식지 파괴, 외래종의 침입, 오염, 인구 증가, 남획 등인데, 보, 하굿둑, 방조제 등 인공 시설물들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의 회복은 유전자, 종, 서식처, 수생태계의 연결성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이용하면서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모여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창의적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혁신은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창조적 역량을 만들어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하천, 하구 및 연안은 지속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 서해안비전이 선포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남 해양수산분야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서해안 비전과 해양수산분야 발전계획은 이용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보전과 이용이 균형 잡힌 발전계획이라는 면에서 금강비전 및 그 실행계획과 더불어 매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목표이고 책임이다. 충청남도도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준비하는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도량에서 서해까지 이르는 하천과 연안 및 하구의 생태복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통해 충남의 잠재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도량에서 서해까지』는 이와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 선언이다. 국토를 되살리고 생명력 넘치는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충청남도에서 시작되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창의적으로 협력해야 할 곳은 충남연구원이다. ◀

특집1

‘도랑에서 서해까지’
충남의 하구생태복원 의지와 열정

금강의 오염 관리방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정복영 _ 금강유역환경청장



전북 장수군의 작은 샘, ‘뜯봉샘’에서 시작한 금강은 전북·충북·대전·충남을 가로질러 400km의 여정을 거쳐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금강은 충청지역 400만 주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마실 물을 공급해 줄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금강은 조상 대대로 늘 우리 곁에서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다. 강을 따라 역사를 이루고, 문화·생태가 조성되어 그 혜택으로 우리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

금강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노력은 생명을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듯 소중한 금강을 보존해야 할 ‘자원’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충남북지역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1990년 7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었다. 2000년 10월에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중부권의 젖줄 금강 살리기)’이 수립되고, 2002년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제정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조성되어 대청댐·용담댐 상류와 금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각종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받는 대가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각종 규제에 제약받는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최근 유래 없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 등 기후변화로 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강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각종 오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강 상류 대청호의 2015년 평균 수질은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3.4mg/L로 ‘좋은 물’ 등급기준(COD 4.0mg/L)을 유지하고 있다. 중하류 지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등의 영향으로 상류지역보다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2014년부터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2014년 75%, 2015년 58%)으로 대청댐 방류량이 감소(2013년 대비 2014년 66%, 2015년 67%)하여 오염도가 증가 또는 정체되고 있어 금강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전·세종특별자치시·충남 전역과 충북 6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금강의 수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염원의 저감과 차단을 통한 하천의 수질개선, 수생태계 보전, 물환경 관련 기초조사 연구,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변생태벨트 조성, 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선진유역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1.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총 194개 사업에 4,039억원을 투입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 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사업(163개)에 대해 3,423억원을 지원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20개)에 40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과 개량(11개)에 2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면단위 마을하수도 신·증설(57개) 사업에 662억원, 침수예방사업에 462억원, 노후관로 정밀조사(2개)에 13억원 등 총 1,137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물재이용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찌꺼기 감량화와 에너지 자립화 사업(2개)에 대해 38억원을,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4억원 등 총 62억원을 투입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동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점검과 소통도 강화한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계의 수질에 영향이 큰 5,000m³/일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 유입수 우회수로(By-Pass), 유입게이트 인위조작 등 비정상 운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하수도 운영관리 정보교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 생태자원과 연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토



지와 지장물을 매입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매수한 토지는 자연생태계 복원 등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로 조성 중이다.

올해는 주민·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이른바 '맞춤형 생태벨트' 조성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맞춤형 생태벨트'란 생태벨트 조성시에 해당지역의 생태·문화특성, 지형 등을 고려하여 습지·초지·경관림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토지매수 시 수변구역 내 연결한 토지 등 소유자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를 신청할 수 있는 '연접토지 단체매도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토지매수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천 인접지역의 대단위 토지 매수를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역 이장단을 활용하여 제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제도를 활용하면 토지 매수 시 매도인들에게 꾸준히 제기 되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영업손실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매수가격 안정시 불만족도 일정부분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토지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매수토지가 많은 대전, 충북 옥천·영동 등 지역 주민을 토지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순찰 등 사후관리 및 제도 홍보에 활용한다.

3.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도 조기정착 유도

올해부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16~2020)를 시행하여 금강수계 전역에 총인(T-P) 물질의 배출을 할당량 이내로 제한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선진적 유역관리정책이다. 개별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농도관리)을 준수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 오염물질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2년 제정된 금강수계법에 기반하여 2004년부터 금강수계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허용된 배출총량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배출총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2015.9월)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2020년까지 수계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BOD, T-P)의 총량이 확정되었다. 특히 3단계부터는 대청호 상류지역에만 적용되었



던 T-P가 금강수계 전역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금강본류 구간의 부영양화와 이로 인한 조류발생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할당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방법 설명회, 이행평가 작성 방법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정보교류 및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관리 및 총량관리전산시스템 활용기법 등 현장중심 기술지원을 연중 실시하여 3단계 오염총량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총량협의 사업장과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자체별 지역개발부하량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4. 신속한 녹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우선 대청호와 보령호에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취·정수장의 안전한 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청호·보령호 조류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도가 높은 지류·지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녹조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녹조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옥천 등을 대상으로 염화칼슘 살포 등 '인 불용화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조류 증식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폭기시설 75기를 설치하고, 조류 차단막 5개, 수면포기기 10기를 운영하여 조류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청호 상류지역의 부영양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청호 소옥천 유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옥천군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절기 녹조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금강수계 펄스(Pulse)형 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하천수문·저수량 등을 고려하여 댐·보의 방류량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펄스형 방류(Pulsed flows)는 댐·보 수문방류, 자연적 홍수 등 유량이 평시 유량보다 많은 상태로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며, 인위적으로 유량 변화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이 클로로필-a(chl-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에서 2016년부터 녹조현상에서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chl-a) 농도가 기준에서 삭제되고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되었다. 이로 인해 금강수계의 조류경보제 발령일수 증가가 예상되고 발령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녹조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녹조



발생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조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등 대국민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5. 보령호 수질 · 수생태 모니터링 강화

충남서부권 지역(보령댐 유역)의 가뭄에 따른 보령호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하천유지용수를 줄이고, 2015.10월부터 보령댐 급수 8개 시·군 자율급수 조정을 시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는 금강본류와 보령댐을 연계하는 도수로로 긴급 설치하여 보령댐 용수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수로를 통해 금강본류(백제보 하류)의 하천수를 보령댐 상류지역인 반교천에 시설용량 기준으로 하루 11.5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다.(2016.2월~)

금강유역환경청은 보령댐 도수로 신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수질 · 수생태계 등 관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강본류 하천수 유입으로 보령호 수질 · 수생태계 변화를 분석하고 적정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환경기초조사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보령호 지역의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방안 등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주민-시민단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재산권행사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민간단체 주도의 수질오염감시 및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갈수기 하천유량 감소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갈수기 금강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폐수 위·수탁업체를 집중단속하고 2016년 완료 예정인 기초시설(36개소, 4.5백만톤/일)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 자동측정망(한국환경공단)을 상시 운영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강화한다. 지자체 · 금강물환경연구소 · 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수질관리 비상협의체'를 운영하여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댐 · 보의 방류수량 조정 및 사고방제를 위한 합동 훈련도 연 3회 실시하여 사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다. 언뜻 보면 물이 아래로 흐르니 위쪽의 맑은 물이 당연히 맑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강의 상류를 깨끗하게만 한다고 해서 하류까지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상수원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취수원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중하류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고, 하천의 자연정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천을 조성해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후손에게 물려줄 '비단결 같은 금강'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금강수계 물관리는 약 400km 금강의 길이만큼이나 수많은 사람과 지역, 그리고 동·식물의 이해관계까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 금강수계의 수질과 수생태 보전은 금강을 둘러싼 5개 시·도 지자체와 상·하류 지역주민의 서로 다른 여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부상조의 공영의 정신이 밑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맑은 금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특집2

‘도랑에서 서해까지’
충남의 하구생태복원 의지와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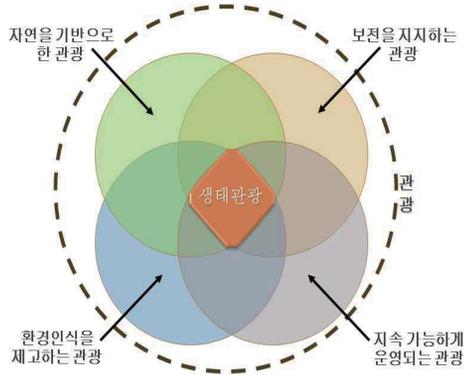
높은 가치의 서해연안 생태관광

이인배 _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생태관광의 특성과 지역발전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생태관광이다. 생태관광은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생태관광을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생태관광 틀 (Buckley 1994)

자료 : 김민혜, 2009, '관광지를 활용한 환경교육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생태관광은 일반 관광과 달리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저해요인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의 자본보다는 지역의 자본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델로서 지역주민의 개개인, 지역 업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의 네트워크 및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방문객의 경우 건강한 생태자원을 통한 관광활동의 만족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관광에 대한 만족감이 극대화 되는 것이다.

생태관광은 운영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다시 생태보전에 투입한다. 이로 인해 보전되며 복원된 생태자원의 경우 생태관광 상품성 및 시장 경쟁력을 높여 수익의 증대를 가져오는 선순환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관광은 선순환적 지역발전에 의미가 있다. 더불어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생태관광의 경우 수익 또한 지역 내에서 순환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주민의 직접적인 지역주민 소득과도 연계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의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자발적인 보호활동으로 이어져 지역의 생태자원이 보전되는 결과를 낳는다. 뿐만아니라 생태관광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생태자원이 보전되는 등의 장



점을 지니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역민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등의 사회적 장점도 지니고 있다.

[표 1] 생태관광 특성

구분		세부내용
환경적 지속성	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소비 최소화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증진 ● 수용력 기반 관광객 수 제한을 통해 자원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수용력 기반 소규모 개발 지향 ● 관광객의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 ●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자연 및 문화 경관의 보전 ● 친환경 생산활동(유기농재배 등) 및 친환경건축 도입 ● 생태관광 편익 일부를 보전활동에 환원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문화·자연 매력물을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참여 ● 대상지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생태관광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 생태관광 관련 주민간 갈등의 이해와 저감 노력 ●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이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문화적 지속성	환경인식 증진 및 양질의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제공 ● 지역사회와의 교류기회 확대 ● 자원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정보 제공
	경제적 편익창출 및 합리적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전통적 경제활동 보전 ● 관광의존도를 낮춤 ● 지역을 대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매력요소 발견 및 개발에 초점을 둬으로써 시장 경쟁력 확보 ● 지역역량에 부합하는 공급량 산정 (외부자본 유입 및 편익누출 최소화) ● 지역생산물을 1차적으로 이용한 상품 개발 ● 지역생산물의 상품화로 관광이외 지역경제활동의 매력성 증진

자료 : 정옥식·김경태, 2015, 「유부도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충남녹색성장포럼

■ 국내 생태자원의 현황과 생태관광 정책 동향

생태관광자원은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장소,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장소에 해당하는 생태관광지는 한국형 생태관광모델사업지(20개소), 자연(국립·도립·군립)공원(76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26개소), 습지보호지역(24개소), 해안사구(33개소), 자연동굴(33개소), 특정도서지역(164개소), 하구역(19개소), 철새도래지(15개소), 문화생태탐방로(10개소), 숲길(8개소), 생태문화탐방로(24개소) 등이 있다. 그리고, 생태관광시설로는



자연환경보존 및 이용시설(37개소)와 생태관광프로그램으로는 국립공원 생태관광프로그램(92개),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194개), 4대강 생태관광프로그램(22개), 지자체추천생태관광프로그램(78개) 등이 있다.

앞의 생태관광지에서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지의 종류는 내륙습지, 연안습지, DMZ, 철새도래지, 산과 강, 섬, 해안사구, 화석·동굴 등이 있다. 이들은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으로써 충남의 서해안지역에도 다수가 입지하고 있다.

생태관광 정책 동향으로 국가에서는 2008년부터 생태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및 녹색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질 높은 여행경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적인 환경보전과 관리 등을 목표로 하여 한국적 특성이 담긴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적 특성이 담긴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6대 전략

전략1 : 국민들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 확충

- 자연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 확충
- 생태·역사·문화를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로, 생태마을 조성

전략2 : 이야기와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문화·역사·전통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프로그램 개발

전략3 : 홍보와 마케팅으로 수요창출

- 생태탐방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생태관광 정보 제공
- 생태관광 마케팅으로 생태관광 수요 창출

전략4 : 우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으로 국가 환경가치 제고

-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
- 생태관광으로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전방안 마련

전략5 : 제도정비

-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인증제 도입 등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 주민참여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및 부처간 정책조정 시스템 구축

전략6 :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성공모델 창출
- DMZ, 백두대간 등 한국적 특성이 담긴 관광자원 개발 확대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생태관광 특성화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생태관광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충남 서해안 생태자원의 특성과 활용성

충남의 서해안은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생태자원이 숨겨진 보고이다. 우선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지 중에서 2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충남 서산시 천수만의 철새도래지는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300여종 4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이다. 그리고,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는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환충기능을 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사구이다.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으로는 충남에 태안해안국립공원이 국내에서 유일한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에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독산리 일원에 해안사구 및 희귀 야생동물 서식지로 소항사구가 지정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원의 신두리사구 해역이 다양한 식생과 특이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국제적으로 람사르습지가 2015년까지 전국에 총 2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충남에 충남 태안군의 두웅습지와 서천군의 서면·유부도 일대의 서천갯벌 등 2개소가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두웅습지가 신두리사구의 배후습지로 희귀야생·식물 서식지로 지정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종천면 일원에 서천갯벌에 검은머리물떼새 서식과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내에 있는 주요 해안사구로는 충청남도에 원청(태안군), 소항(보령시), 구례포(태안군), 삼봉(태안군), 신히(서천군), 원산(보령시), 오봉(보령시), 삼시도(보령시), 운여(태안군) 등 9개소가 있다. 환경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특정도 서지역은 나무섬, 납작도, 대길산도, 대청도, 오도, 추도, 황건도, 흑어도, 옥도, 묘도, 북격렬비도, 곳도, 묘도(토끼섬), 솔섬, 외황건도, 변도, 오도, 석도 등 18개소이다.

또한, 국내의 주요 철새도래지로서 충남 서해안에는 충남 서산시 천수만, 서천군 금강하구둑과 유부도, 태안 난도팽이 갈매기 서식지, 아산시 아산호 등이 있는데 아산호는 환경부 생태문화탐방로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으로는 '태안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의 절경, 사구가 되살아나는 희망여행'과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 등이 있다. 그리고, 생태해설프로그램으로 '모래언덕이 늘어났어요(기지포 자연관찰로)', '살아있는 몽산포 갯벌이야기', '살아있는 연포갯벌이야기', '한 눈에 보고 느끼는 몽산포 해안생태계', '한 눈에 보고 느끼는 학암포 해안생태계', '꽤각



〈그림 2〉 UNWTO 사업 대상지

자료 : UNWTO 웹사이트, 2015



을 활용한 나만의 바다 만들기, '염전이야기', '독살 이야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멸종위기종을 찾아서' 등이 있다. 더불어 지자체 추천 생태관광프로그램은 서산시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서산 생태관광과 서천군의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어메니티 서천 체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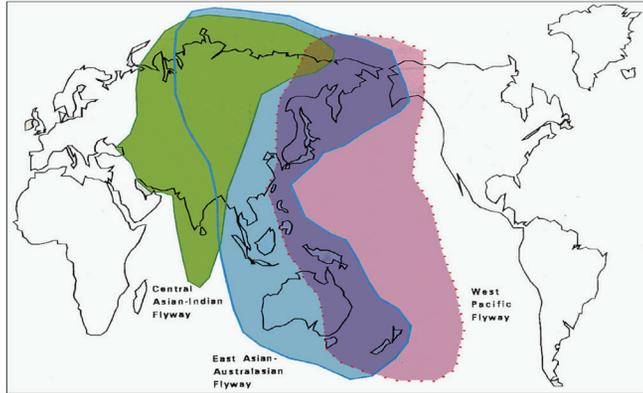
특히, 서천군의 금강하구둑 앞 바다에 있는 유부도는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시에 국제적인 습지보호지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유부도는 중요 습지를 판단하는 국제 기준을 3가지 이상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중요 습지이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UN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주도하는 이동경로상의 생태관광지 운영의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었으며, Birdlife International 등과 같은 국제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유부도를 비롯한 금강하구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상의 등록된 거점 서식지이며, Birdlife International 아시아 지부에서는 본 네트워크상의 388개 서식지 중 핵심서식지 11곳을 선정하였는데 금강하구(유부도)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충남 서해연안의 생태자원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기구와 중앙정부의 보존자원으로도 다수가 등록되거나 지정되어 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과 사구, 철새 등의 희귀동식물, 섬과 해안경관 등은 생태자원으로서의 보존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활용가치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선순환으로 서해안 생태관광의 가치를 제고하자

충남의 서해안은 강과 육지로부터 유출된 담수가 하구역에서 만나고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이다. 여기에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기능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잘 보존하면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가치가 매우 큰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남의 서해안이 보유하고 있는 해안자원 중 가치가 큰 생태자원을 발굴하여 잘 보존하면서, 그 생태자원은 해당 지역의 환경에 맞도록 해안의 자연생태계가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은 원형을 유지토록 하고, 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생태자원은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태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자원으로서 경제가치를 제고할



〈그림 3〉 동아시아대양주철새네트워크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자료 : 정옥식·김경태, 2015, 「유부도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충남녹색성장포럼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연계해야 한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생태자원의 보존과 생태관광의 활용은 주민이 선도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의 추진생태계가 구축되어 지역발전에서도 선순환의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러할 때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생태관광을 위한 사업에도 동시에 지역주민참여가 이루어져 양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생태자원을 생태관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시설개발보다는 최소한의 관광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간접적인 시설이나 공간을 통한 생태체험이 나 적절한 방문객을 유치하여 해설과 답사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여행 프로그램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 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서해안의 생태관광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생태계와 지역발전 생태계가 선순환을 통하여 달 려갈 때 수레의 두 바퀴가 맞물려야 잘 굴러가듯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민혜, 2009, 「관광지를 활용한 환경교육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녹색관광 발전전략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생태관광 통계조사」
- 정옥식·김경태, 2015, 「유부도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충남녹색성장포럼
-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2008,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UNWTO 웹사이트, 2015



특집3

‘도랑에서 서해까지’
충남의 하구생태복원 의지와 열정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통한 충남 수산업 활성화 방안

— 청양군 지천 사례를 중심으로 —

황선도 _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장
손성규 _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주임



1.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이해

1. 우리나라 하천개발

우리나라의 하천개발사업은 주로 토지이용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용수와 치수 기능 위주로 하천정비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하천생태계의 훼손 및 자원감소를 유발하였다.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태계 보존과 복원의 관점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는 수리적 안정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하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 그리고 현장에 적합한 설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김 등, 2007).

2. 내수면 자원조성의 필요성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내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내수면 자연성을 회복함으로써 수산생물자원의 자율갱신 유도를 통한 내수면 가치증대를 지향점으로 한다. 즉, 환경을 보존하고, 인위적으로 왜곡된 내수면 서식지를 복원하며, 수산생물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친환경적 수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근대화와 함께 호수와 하천 및 저수지 등의 내수면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에 의한 수생태 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수면 수산업이 위축되어 있다(해양수산부, 2005). 내수면 관련 사업은 주로 용수 확보를 위한 횡단구조물 설치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방공사 등의 치수를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호수 및 하천과 수변 물가부지를 이용한 가치증대 방안은 구호일 뿐이었다. 전반적으로 환경보존은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연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의 자연하천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수산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적극적 내수면수산자원관리 비전이 절실한 실정에서 내수면 자원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된 수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내수면에 생물자원을 조성하여 내수면 자원 회복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과 서식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수면 자원조성 모델을 마련하여 수권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II. 내수면 자원조성 및 이용관리 방안

1. 현황 및 실태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관련법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내수면 관리는 농어촌정비법, 내수면어업법, 수자원공사업,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관리 대상 및 범위, 성격 등에 따라 여러 소관부처에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표 1] 내수면 관련 여러 소관부처의 다양한 법령

소관부처	세부 법률
국토교통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촌정비법,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
소방방재청	● 소하천정비법
해양수산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수면어업법, 농어촌정비법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또한 여러 법령을 통해 토지의 이용규제가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하기 위해 살펴되어야 할 대표적인 제한구역 및 관리구역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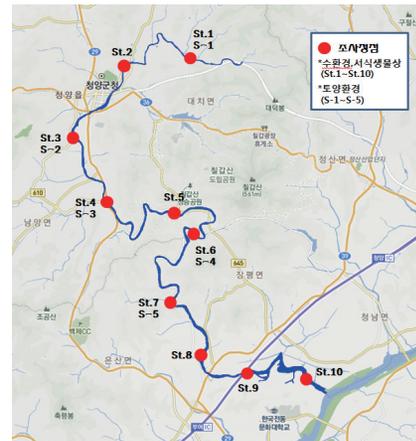
[표 2] 토지이용규제 검토 항목

구분	자연환경부문	물환경부문	기타부문
항목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도서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구역 친수구역 홍수관리구역 소하천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생활권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주제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절대보존지역 상대보존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전림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지정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계	13	7	19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대상지역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인구, 업종, 토지이용, 주요 생산물, 하천이용 현황(어업현황 등), 기존 사업현황, 오염정화 시설현황, 관광자원 등 관할 행정구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과 내수면 자원조성지역의 수질 및 바닥지질, 유영생물, 저서생물, 수변동식물, 주변식생 등의 생태계 실태, 그리고 호안, 보, 어도, 취수구 등 하천구조물의 현황조사 면밀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성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련법과 토지이용규제 대상의 충분한 검토, 대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자연환경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은 내수면 자원조성의 가능 여부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과정이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지천의 지리학적 실태조사 결과, 중류(St.4~7)에서 유폭이 넓고 수심이 깊으며 굴곡이 심한 계곡형의 특이한 지형



〈그림 1〉 실태조사 정점

을 보였다. 지천의 서식생물상은 '다양'하고, 생태학적 다양성은 '양호'한 편으로 자연하천의 특성을 보였다. 수환경 및 분류군별 생물상과 군집 생태지수 등을 종합할 때, 대치면 개곡리(St. 5)에서 가장 양호한 서식환경을 보였고, 횡단 구조물이 없이 자연적인 하천형태를 보이는 중·하류(St. 5~8)가 수산생물자원 조성에 가장 적합한 수역으로 검토되었다.

지천의 하천구조물 및 수변 실태는 보가 대부분 기능은 하나 어도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었으며, 어도는 전반적으로 경사도가 크고, 격벽이 없는 어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어오르는 참게, 뱀장어 등의 수산자원생물이 이용가능 한 어도는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수변의 일부 시멘트 호안구역에는 수생물의 산란 및 보육을 위한 피난처가 부재하였으며, 청양읍을 지나는 수변부는 그늘이 없어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생태체험관광 현황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으며,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소규모 지역 민간단체의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 운영됨에 따라 행사규모가 작고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그림 2〉 하천구조물 실태

2. 내수면 자원조성 방안

내수면 자원조성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산생물자원의 조성, 두 번째는 수산생물의 서식공간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이용한 생태체험관광 조성이다.

수산생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대상종을 목표종으로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해양에서의 수산종묘방류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천 및 강, 저수지 등에서도 내수면 수산종묘의 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3]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품종(15종)

-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대농갱이, 동남참게,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 ※ 다만,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꺾지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 〈출처 : 수산종묘관리사업지침, 해수부, 2015〉

대부분의 방류종들은 지역 어업인의 요구에 의해 방류되는 경제성이 높은 어종들이며, 방류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그 지역에서 주요 어업 대상종으로 이용될 만큼 비교적 풍부하였던 어종들이었으나, 무분별한 하천개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이들 종의 자원량이 급감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수산종묘의 방류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면의 자원조성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수면사업에서는 방류사업과 같이 단편적인 방류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수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과학적 환경조사 및 분석으로 현지에 가장 적합한 방류 품종을 선정하고, 방류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설정하며, 방류 후 이를 이용·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여 지속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내수면의 수산생물 조성방법은 방류 대상종의 생활사뿐만 아니라 기타 수산생물과의 피포식 관계, 회유 환경, 먹이생물의 풍부도 등을 고려한 품종별·구역별 최적 조성방안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방류사업과 같은 양적인 증대사업이 아니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환경적합형 자원조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서식공간 조성은 수산자원 증대 및 재생산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용수와 치수 위주의 무분별한 하천 개발사업으로 인해 강과 하천, 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수산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장 및 산란장이 소실된 상황이다. 따라서 훼손된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자원증대 목표종의 생태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복원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천의 수위와 흐름을 조절하는 각각의 횡단구조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 및 설치구역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서식생물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개선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에는 수량이 많지 않은 하천상류부에 보와 같은 저수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고, 하류로 내려가면서 수량이 풍부해지는 곳에는 대형 댐이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횡단구조물에 의해 수산생물의 이동이 저해되거나 차단됨에 따라 하천생태계가 구간별로 분리되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구조물들이 내수면 생태계를 무시하고 시설된 것은 아니고, 일부 보와 댐에는 수산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어도를 설치하여 생태계 단절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다.



〈그림 3〉 우리나라 수리구조물에 설치된 어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소상하려는 수생동물의 이동을 저해하는 시설물에는 어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도가 설치된 보는 전체의 15% 정도로 매우 낮은 어도 설치율을 보였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하천에 설치된 보는 모두 34,012개소이며, 어도가 설치된 보는 5,081개소(14.9%)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도는 1,628개소(4.8%)로 조사되었다.

지천에 설치된 보는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도는 경사가 급하거나 내부 격벽에 의해 소상생물의 이동이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도설계 표준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 실제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어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 및 어도의 실태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구역에 맞는 시설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에서는 기능상실 보의 철거, 보와 어도의 기능을 함께 갖는 돌보로의 교체, 경사와 용수의 이용 등을 고려한 어도 신설, 특정 대상생물을 대상으로 한 생태형 어도 설치, 기능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등 각 구조물의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조성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수자원의 이용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어도 신설 예시



〈그림 5〉 돌보 교체 예시



〈그림 6〉 생태형 어도 설치



〈그림 7〉 보 철거 예시

구분	개소	개선 방안
●	2	양호(그대로 존치)
●	5	돌보 교체
●	5	어도 교체(하이스터버식 어도)
●	9	어도 신설(하이스터버식 어도)
●	7	부착어도 설치(생태어도)
●	2	어도 보수보강(간단한 보강작업)
●	6	철거(보 기능 못함)
합계	36	

구분	개소	개선 방안
●	8	돌보
●	15	하이스터버식 어도
●	6	계단식 어도+부착 어도(생태어도)
●	1	도벽식 어도+부착 어도(생태어도)
합계	30	

〈그림 8〉 보와 어도 개선 예시

호안 및 수변부의 경우, 정화식물 식재, 어부림 조성, 생태호안블록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하천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생태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수산생물의 서식처 및 산란장 제공과 함께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수변부 개선 예시

최근 삶의 질 향상이 부각되면서 자연 체험과 건강한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주말이면 도심을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전통 문화 및 음식, 명소, 문화재 등을 이용한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의 관광자원과 내수면 수산생물자원을 연계한 생태체험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도 내수면 자원조성의 주요 목표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내수면 수산생물을 이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산천어 축제, 빙어 축제, 참게 축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축제는 특정 생물의 잡고 맛보는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나, 내수면 생태체험관광은 그 지역의 주요 특산물, 자연환경, 문화를 서로 연계하여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발전과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천의 경우, 생태체험관광 개선 사항으로 아름다운 하천 경관과 하천 주변 시설물 활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쇠편이 입구에서 대치면 작천리까지 약 8km 구간에 지천 탐방로 설치를 제시하였다. 이곳에 징검다리, 뜬다리 데크, 물레방아, 안내판, 참게와 다슬기 생태체험장 등을 적합한 곳에 조성하게 되면 생태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수면의 생태체험관광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0〉 생태체험관광 개선 예시

3. 내수면의 이용 및 관리 방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리이다.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과 많은 노력으로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을 완성한다고 해도 그에 적합한 관리와 적절한 이용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물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내수면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산생물자원과 체험관광기반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수산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운영한다. 자율관리공동체는 대상 지역의 주민과 어업인을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구성하며, 지자체는 자율관리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은 최소화하여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관리주체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관리공동체의 주요 활동내용은 생물자원 및 서식장 조성, 그리고 체험관광 기반 조성의 추진과 모니터링, 불법어업 단속 및 관리 등이다.

내수면과 주변 자연환경을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서적 및 기념품, 캐릭터 산업 등 지역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홍보와 수익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지역 축제와 연결하여 보다 다채롭고 친환경적인 생태문화축제를 특화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증대된 수산생물을 이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민가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한 생태숙박시설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부가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체험 및 관광개발은 지자체와 자율관리공동체,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인 아이템 개발과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 충남의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추진 방향

우리나라에는 2013년 10월 기준 국가하천 61개소와 지방하천 3,789개소가 있다. 충청남도를 흐르는 가장 큰 물줄기인 금강에는 총 886개소(국가하천 17개소, 지방하천 869개소)의 하천이 존재하여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로 많은 하천이 형성되어있다. 금강권역의 하천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용수와 치수 시설물의 설치와 제방 및 호안 정비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왔다.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범위가 미미한 수준일 뿐이며 수산자원의 증대를 위해 단순 방류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천의 환경과 수산생물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성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충남의 수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하천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청양군의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천 개발 및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사업내용을 파악하고 내수면 조성기술을 이들 사업에 접목함으로써 기존의 환경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2014년 '지천 100리 금강 목장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내수면 및 주변 환경, 생물,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종합적인 내수면자원조성 모델을 마련하였기에, 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기존 수행 중인 사업의 연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내수면 자원조성 모델을 금강권역 하천에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다. 즉 금강권역의 국가 및 지방, 소하천에서 시행될 하천사업에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의 자원조성 및 이용·관리 방안 등을 적용하여 그 지역의 환경 특성에 적합한 생태조형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다. 금강의 하천들은 위치와 형태, 주변 환경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므로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의 조성기법을 활용할 때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사회구조 및 문화, 자연환경 등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 하구역의 환경개선과 함께 경제성이 높은 수산생물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 금강 하구역의 개선은 금강권역의 수산생물자원 조성 및 활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로 금강유역의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천의 생물자원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생활사에 따른 순환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유지시켜야 하며, 특히 대표적인 내수면 고부가가치 수산생물인 참게와 뱀장어의 경우, 바다와 하천을 회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물에 의해 이동(소상, 강하)이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금강 하구역에는 이들 생물의 이동 특성(기어오르는 습성)을 고려한 생태 어도 설치와 자원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가입(방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금강 하구를 포함한 기수역 수산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하구역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자연, 생태, 역사, 문화를 되살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금강', 즉 「금강비전」의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의 생물자원 조성 및 이용·관리방안들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금강비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금강비전에서 제시한 '지역자원의 역량에 바탕을 둔 비전'과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이 서로 일맥상통함으로 금강비전의 세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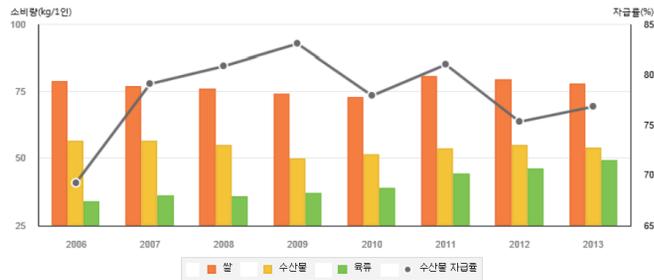


에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의 기술적인 부분과 이용체계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기존 하천사업의 연계], [금강권역 하천에의 적용], [금강 하구역 개선], [금강비전 연계] 등의 중장기적 추진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정하게 적용하여 금강권역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소비자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소비 자급률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 수산물 소비량과 자급률
〈출처 : e-나라지표〉

국내 자급률의 감소 원인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인데, 그 중 기후변화, 남획, 해양오염, 무분별한 개발 등에 의한 수산자원의 감소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의 정착 및 한·일, 한·중 등의 연안국 간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어장의 축소가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연안역에서는 해양수산자원 증대와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어민소득증대와 어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다목장조성사업이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에 의해 수산생물자원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는 내수면에서는 바다목장조성사업과 같은 종합적인 자원조성·관리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젊은 층의 도시이주와 어업소득의 감소로 인해 업종을 전환하거나 어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내수면의 수산생물자원을 다시 회복시키고, 증대된 자원과 복원된 환경,

문화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은 바다목장조성사업의 우수한 조성·관리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누적된 노하우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수면의 특성과 환경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수면 수산생물자원의 효과적인 조성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한 소득원 개발로 하천 유역의 어업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정부의 시책 반영을 통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전문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조성·관리 의지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2005. 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pp. 100~112.
- 국토해양부, 2009. 하천설계기준·해설.
- 김윤환, 박남희, 진영훈, 김철, 2007.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한 호안평가기법의 개발 및 적용. JKWRA, pp. 1007~1014.
- 전동준, 김지영, 김태형, 은정, 2013. 4대강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333p.
- 한국농어촌공사, 2011. 내수면 목장화사업을 통한 어민소득증대 방안 연구. 92p.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4. 지천 100리 금강 목장화사업 기본계획수립. 299p.
- 해양수산부, 2005. 내수면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pp. 1~2, 352~353
- e-나라지표, www.index.go.kr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최영화 _ 초빙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수립된 데 이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이 2015년에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충청남도는 이미 2014년 7월에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타 광역자치체도 2015년 말까지 중앙정부에 시·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 연계한 시·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충청남도·시·군의 행정·정책입안자들과 지역의 문화전문가들에게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에 적합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참고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역문화정책 여건

1) 지역문화의 정의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동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의 범위도 이와 같다.



<그림 1>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의 범위

2)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에서는 법의 목적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핵심 내용은 제3조(원칙)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과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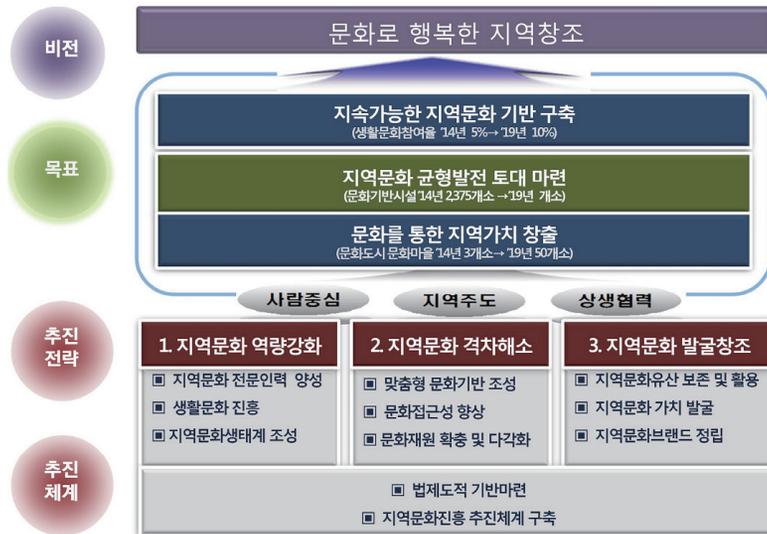
목적 (제1조)	①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지정 ②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③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 ④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⑤ 문화국가 실현
원칙 (제3조)	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②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③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④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그림 2〉 지역문화진흥법과 계획 간 위계



3) 중앙정부 기본계획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을 2015년에 수립하며,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라는 비전 아래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라는 3대 추진전략과 9대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그림 3〉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4) 충청남도 시행계획

충청남도는 2014년 7월 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문화로 도민에 행복을, 충남에 미래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 도 내 15개 시·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중앙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 연계되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4> 충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비전 및 4대 목표와 10대 전략

자료 :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3. 충남 시·군 시행계획 수립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충청남도 15개 시·군 문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현황에 대한 인식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조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 시·군 중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당진시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 미수립의 이유는 '내용을 정확히 모름'이 100%를 차지해 계획의 내용과 효용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조례 현황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시·군이 '조례 있음'(46.6%)이라고 답했고 '조례 없음'이라고 응답한 시·군은 6개(40.0%)이며, '조례 제정 중'인 시·군과 '조례 마련 예정'인 시·군은 각각 1개(6.7%)로 조사되었다.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자체적인 법적·정책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중점과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과 연계했을 때 각 시·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역문화 발굴창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순이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는 '지역가치 발굴'과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준비/필요사항

각 시·군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활발하게 수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 지원할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주체별로 중앙정부는 '기본계획 수행 예산(국고 확보)'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을, 충청남도는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과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를 시·군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문화현황 조사'와 '계획수립 예산 확보', '주민 문화수요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기대효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40.0%) 과 '지역문화기반 구축'(26.7%)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1)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 및 충청남도의 지원방안

① 중앙정부의 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확보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평적이고 순환적인 협력체계와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구축함으로써 광역 지자체와 함께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와 수립지침을 제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② 충청남도의 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충청남도에서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시·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 지원', '기본현황 조사자료 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실상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에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2) 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의 공통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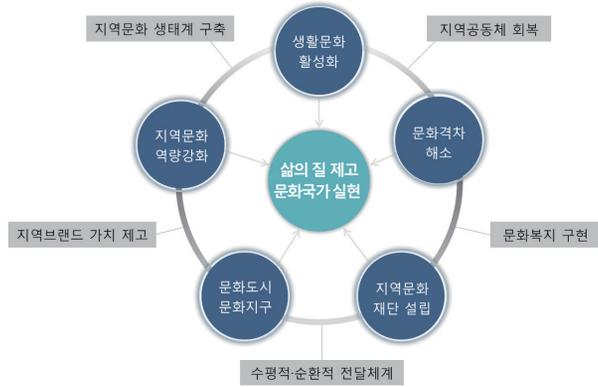
시·군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재단과 공신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 문화예술가·단체, 문화전문인력, 문화정책 전문가들의 의견과 문화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된 협의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계획을 수립한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 현황과 실정에 맞도록 수용하고 변용할 필요도 있으며, 읍·면·동 단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사업을 발굴해 반영한다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한 시행계획의 수립이야말로 주민들이 생생하게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자치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참고지침



① 지역문화진흥 계획의 효용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한 계획의 시행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지역문화 발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법과 계획의 효용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높아질수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진흥법과 계획이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에 어떤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또 그 효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요약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지역문화진흥법과 계획의 핵심 및 효용 가치

② 법률 및 상위계획과의 체계 연관성 및 정당성 확보

법률 및 상위계획과의 체계 연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행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화환경이 열악하거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시·군일수록 상위계획과의 체계 연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사안과 지원 대상 및 범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시행계획의 비전, 정책방향, 추진과제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계획에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지역별 문화지표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 수립

● 지역 문화역량에 따른 계획 수립 주체 구성

충남 시·군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질적 주체이자, 민간협력 파트너인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세 곳에 불과하다.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수만 놓고 보아도 충청남도 내 시·군의 지역문화역량은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모든 시·군에 적용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공하기란 어렵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책 입안자가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누가’ 시행계획을 짤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지역 문화역량의 형편에 맞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 지역민들의 문화적 수요 조사 및 반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현황과 주민들의 문화수요가 파악되어야 되고, 그 결과가 시행계획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문화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는 현장답사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문화지표조사 등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현황 조사와 주민의 문화수요 조사는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지역문화지표 조사결과 활용

지역문화지표란, 지역문화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통계자료이며, 지역문화의 발전현황과 변화추이의 파악을 위한 측정도구다. 그것은 추상적인 지역문화의 구축과 발전정도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기본 틀이며, 보다 효과적인 지역문화정책 방향정립의 토대가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3년에 발표한 지역문화지표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내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정책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더 많이 개발하고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 지역별 특성화 계획 수립

지역문화지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문화역량, 문화자원, 문화기반의 크기는 제각각이다. 지역별 문화환경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과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행정·정책 입안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역문화지표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여 지역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행계획에는 공통적으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의 핵심적 요소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시행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별 사업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지역 내 타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 강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기존의 사업들 중 의미와 성과가 있는 사업은 새롭게 수립되는 시행계획 속에 재배치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도시재생사업, 관광사업, 문화도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이러한 계획들과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추후 예산 확보나 계획의 실질적 추진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새롭게 개발되는 정책과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5. 결론 및 제언

시·군에서 수립할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화려한 비전이나 거창한 목표보다는 쉽고 간명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비전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을 위한 계획’,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겠으나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그만큼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한 중요한 계기이자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015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45호], 2014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20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2013





충남
논단
II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극복을 위한 충청남도의 수자원 활용방향 및 과제

김영일 _ 물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우혁 _ 물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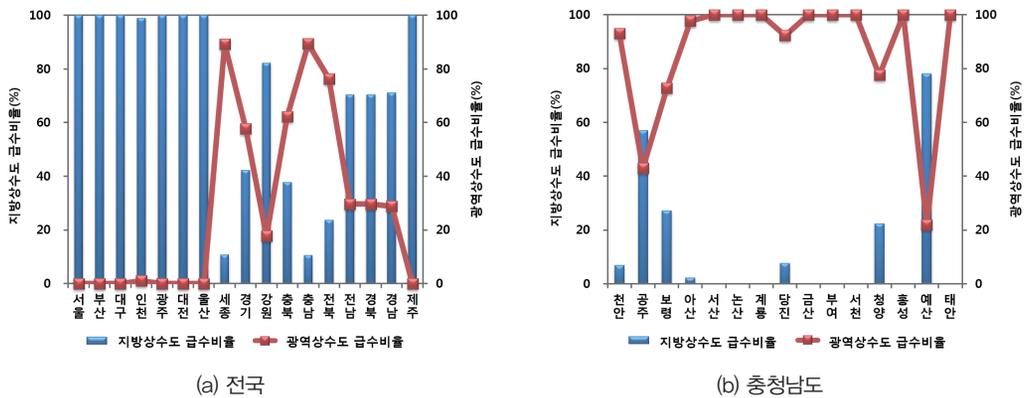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변화로 시·공간적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에서도 지난 2012년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04년만의 대가뭄이 발생하였고, 2015년에는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충남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8개 시·군에 하루 20만톤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량이 감소하였으며, 보령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의 생·공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0월 8일부터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의 생활용수 20%를 감량하여 공급하기 위한 자율 급수조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보령댐에서 생·공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당진시는 하루 2만 1천톤의 물을 대청댐에서, 서천군은 1만톤의 물을 용담댐에서 받도록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일부 조정하였다. 또한, 보령댐 저수량 감소로 인한 용수공급의 차질을 우려하여 금강 백제보 하





〈그림 2〉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급수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광역상수도 급수비율이 89.4%로 전국 평균 28.3%에 비해 월등히 높아 광역상수도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개 시·군(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은 광역상수도 급수비율이 100%로 지방상수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 급수비율도 충남 전체비율과 유사한 85.1% 정도로 보령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급수비율 현황

2.2 광역상수도 급수에 따른 지방상수도 폐쇄

광역상수도를 전량 급수 받고 있는 충남 8개 시·군은 자체 정수시설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공주시와 예산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급수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상수도 급수비율이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방상수도(수원 및 정수시설)를 폐쇄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표 1]에서와 같이 자치단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정수장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광역상수도 급수비율 증가 및 지방상수도 폐쇄에 따른 상수원의 기능상실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상수원이 감소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예산군에 6개소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정수장 폐쇄 및 전환계획

자치단체	정수장명	폐쇄 및 전환계획	비고
공주시	옥룡정수장	2008년 충남중부권 원수대체(정수시설은 존치)	공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2010)
	유구정수장	2020년 폐쇄계획, 충남중부권으로 전환	
보령시	청라정수장	2011년 6월 폐쇄, 보령댐광역으로 전환	보령시 수도정비 기본계획(2008)
	성주정수장	2016년 폐쇄계획, 보령댐광역으로 전환	
아산시	용화정수장	2020년 공업용수 전환(11,500m ³ /일)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2013)
당진시	행정정수장	2010년 10월 폐쇄, 대청댐광역으로 전환	당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2010)
	합덕정수장	2020년 폐쇄계획, 대청댐광역으로 전환	
금산군	금산제1정수장	2013년 3월 폐쇄, 금산무주권광역으로 전환	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2008)
	금산제2정수장	2013년 3월 폐쇄, 금산무주권광역으로 전환, 원수(6,500m ³ /일) 한국타이어에 공급	
청양군	청양정수장	2013년 8월 폐쇄(2010년 4,000m ³ /일 휴지)	-
	정산정수장	2020년 폐쇄계획, 대청댐광역으로 전환	

자료 : 충청남도, 충남 수자원 종합계획, 2014

[표 2] 충청남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13년 말 기준)

자치단체	상수원 보호구역명	보호구역 (개소)	지정면적 (천m ²)	지정거리 (m)	지정폭 (m)	거주인구 (명)
천안시	천안	1	592	1,530	60~240	15
	성환	1	873	2,700	140	-
	병천	1	410	2,400	65~120	-
공주시	유구	1	514	4,900	30	-
아산시	온양	1	552	2,100	250	90
예산군	예산	1	2,601	4,300	300~1,500	224
총 계		6	5,542	17,930	420	329

자료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2014

3. 충청남도 수자원 활용방향 및 과제

3.1 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지역적·시간적 편차가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강수량 편차로 인해 지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과대한 물 이용과 배출로 인해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하여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물 관리 방식이 관 주도의 상수도 공급 및 확대(상수도 보급률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보령댐 사례와 같이 공급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수요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물 관리 방식을 공급자 위주의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물 관리방식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지방상수도 복원 및 확대

충남은 광역상수도 급수비율이 증가하고 지방상수도가 폐쇄됨에 따라 용수를 대부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특히, 보령댐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은 물 안보 및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해 현재의 중앙집중형(보령광역상수도) 시스템을 급수관로의 안정성, 다양한 수원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영향범위의 최소화, 환경적인 영향 최소화 등과 같은 장점이 많은 분산형(지방상수도)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휴 또는 폐쇄되어 있는 지방상수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현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예를 들면, 천안시, 공주시, 예산군)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수원 및 정수시설의 문제로 인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복원을 통해 생활용수 대신 공업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비상용수시설(재난 및 재해, 수질사고 대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3.3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망정비사업의 추진

충남의 누수율은 15.7%로 전국 평균(10.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누수율 저감을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상수관망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은 누수율 저감을 통해 보령댐의 물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상수관망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서천과 예산의 누수율은 충남 전체 평균보다 약 2배 이상 큰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이 지역의 상수관망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그 동안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비도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유수율 유지를 위해서는 상수도관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국비 확보방안 이외에 수도요금 현실화방안을 포함하여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수원다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 안보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댐, 하천 등 단일 수원 위주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기존 댐과 하천 이외에 호소(저수지 포함), 지하수, 사방댐, 소규모 식수댐, 해수, 빗물, 물 재이용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재해(가뭄) 및 사고에 대비하고 물 공급을 안정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은 충남 서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수원다변화를 통해 가뭄과 같은 재해 및 수질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중수원위터루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다중수원 위터루프시스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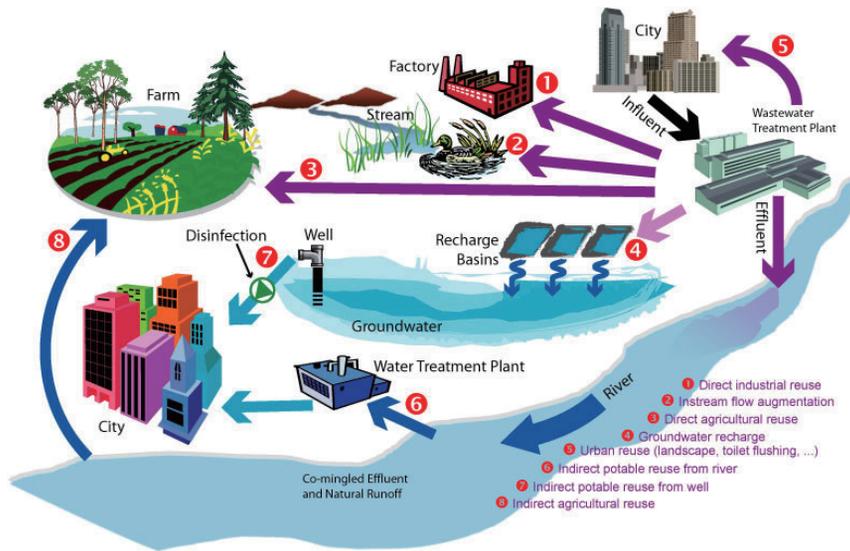
자료 : 스마트위터그리드 연구단

1) 기존 상수원(하천수, 호소수) 뿐만 아니라 지하수, 빗물, 사방댐, 식수댐, 해수, 물 재이용수 등 다양한 수원을 루프형태로 연결하여 상황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3.5 물 재이용을 통한 용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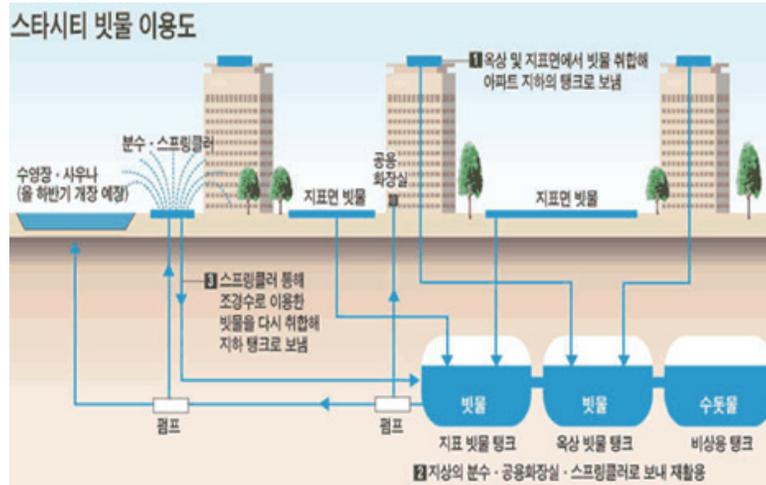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한 의존율을 경감시키고 수자원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수, 중수도, 빗물 등 물 재이용을 위한 정책 및 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충남의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므로 공공하수처리수를 공업 및 농업용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그림 4〉 참조). 특히, 농업용수로 활용할 경우에는 수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충남의 중수도 이용량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개별시설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수도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빗물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수목적 뿐만 아니라 치수 목적의 저류용량 확보, 빗물의 지하침투, 옥상녹화, 생태정원 등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충남의 빗물이용량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빗물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로 〈그림 5〉에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빗물을 이용하는 사례를 나타내었다.



〈그림 4〉 하수처리수 재이용방안

자료 : www.water.ca.gov/recycling



〈그림 5〉 빗물이용사례(스타시티, 서울 자양동)

자료 : 중앙일보, 빗물로 돈 버는 아파트, 2008

3.6 물 절약 캠페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우리나라는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1인당 물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수자원 가용량 감소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물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절수지원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매달 절약한 수돗물의 양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수돗물 포인트제’ 등의 제도를 포함하여 물 절약 캠페인을 충남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 절약을 위해 절수효율이 높은 절수제품(세탁기, 양변기, 식기세척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리베이트 형식으로 일부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의 사용 및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마치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패턴 변화로 인해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가뭄이 발생하여 수자원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을 극복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은 광역상수도 급수비율이 89.4%로 전국 평균 28.3%에 비해 월등히 높아 광역상수도 편중현상이 심한 편이며, 가뭄피해가 발생하였던 충남 서북부지역은 보령댐의 의존도가 85.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공급자 위주의 물 관리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은 현재의 중앙집중형(보령광역상수도) 시스템을 분산형(지방상수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운휴 또는 폐쇄되어 있는 지방상수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예를 들면, 천안시, 공주시, 예산군)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수율을 저감하고 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해 상수관망정비사업은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충남 서북부지역(특히, 서천, 예산)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 안보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댐, 하천 등 단일 수원 위주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호소(저수지 포함), 지하수, 사방댐, 소규모 식수댐, 해수, 빗물, 물 재이용수 등으로 수원을 다변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은 충남 서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수원다변화를 통해 가뭄과 같은 재해 및 수질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중수원위터루프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한 의존율을 경감시키고 수자원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수, 빗물, 중수도 등 물 재이용을 통한 용수확보방안도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1인당 물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므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물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절수지원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매달 절약한 수돗물의 양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수돗물 포인트제’와 절수제품 구입 시 일부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 등을 포함하여 절수기기 사용 및 홍보를 위한 물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령댐 도수로 신설 추진, 2015
- 김영일, 충청남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충남리포트 67호, 충남연구원, 2012
- 김영화, 수자원 자립률 제고를 위한 다중수원 위터루프시스템 개발, 물과 미래, 2013
- 김형수, 미래지능형 스마트 워터 그리드, 물과 미래, 2011
- 스마트 워터그리드 연구단(<http://www.swg.re.kr>) 홈페이지, 2015
- 이원태, 김영일,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체계 구축방안, 충남리포트 183호, 충남연구원, 2015
- 중앙일보, 빗물로 돈 버는 아파트, 2008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수자원관리 토론회(1. 가뭄극복과 수자원 다원화) 자료집, 2015
- 충청남도, 충남 수자원종합계획, 2014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13년 말 기준), 2014
- 환경부, 2013상수도통계, 2014



충남 전통시장의 또 하나의 기회,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이상준 _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고령화시대, 전통시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고령화시대 진입과 전통시장의 쇠퇴

저출산·고령화사회¹⁾로 진입하면서,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심지 공동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쇠퇴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도시 및 농촌지역의 중심지에 입지하며 지역의 인구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쇠퇴는 당연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단순한 판매장소가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거점이다. 더불어 사람들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문화를 형성·발전시켜나가는 커뮤니티 거점이다. 이러한 전통시장 쇠퇴는 단순한 경제시설의 쇠퇴가 아닌 지역 전체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이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국가적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1) 김은경 외(2015),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기도 산업정책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p.3.

2) 청년계층과 청년문화의 도입만이 대안인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낙후된 시설환경과 후진적인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개선에서는 분명한 효과를 얻고 있으나 경영시스템이나 상인 의식 제고에 있어서는 한계점도 보이고 있다.

최근 전통시장에 외부사람, 특히 청년계층 등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청년예술인 도입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이미지와 환경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권'에 입지한 전통시장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계층을 모든 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청년계층의 도입만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안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의 긍정이라고 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대부분 농촌형 전통시장으로 이러한 방식만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청년계층을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상인의 고령화²⁾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도 고령화되고 있다. 지역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청년계층의 도입만을 통한 활성화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지역 대다수인 고령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전통시장의 고령화, 소비자의 고령화는 분명한 화두를 던진다. 과연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고령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카트³⁾, 휴게시설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며, 엄밀하게 말해서 고령자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전통시장이 전통적 상업시설이라는 인식, 고령자 이용 상업시설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목적 계층이 설정되지 못하고 지역 인구 전체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4) 지역인구특성을 고려한 전통시장 활성화 필요

전통시장은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한 활성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가 젊으면 젊은 전통시장이고, 지역 인구가 고령화되면 고령화된 전통시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성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2) 행복한 가게 연구소(2015), 전통시장 상점주 상인 연령, http://blog.naver.com/help_happy.

3) 박상익·서동우(2015), 한국 전통시장론, 한국전자도서출판, p. 172.



현재 수원시와 전주시, 청주시 등 도시지역 전통시장과 같이 청년계층 확보가 용이한 도시지역에서는 청년계층 수요에 부합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 전통시장에서는 고령자를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처럼 적합한 시설이나 지원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방향 및 사례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이란 규정된 명칭은 아니며 고령자의 삶과 관련된 정주·문화·사회 등에서 편안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거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고려한 상점가’ 조성을 상점가 활성화의 화두로 제시하고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제 상점가별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중앙정부 및 상점가연합회 고령자 지원기준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및 전국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全国商店街振興組合連合会) 주도로 고령자가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콤팩트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 쇼핑확대 및 상점가 매출증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1과 같이 개별 상점가 및 점포 등에서 고령자를 위한 시설안전, 서비스, 점포진열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방법을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시설안전과 관련해서는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고령자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도폭 확보, 단차 해소, 휴게시설 확충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배달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점포진열에서는 고령자를 고려한 내부 진열방식이나 시설물 설치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지자체 및 상점가 단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 및 상점가 진흥조합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상점가별로 규

[표 1] 일본상점가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대책

구분	내용
시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자전거 방치, 매대 설치를 없애고, 자전거 이용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도폭 확보 등 ■ 노인이 끄는 카트(장바구니 등)를 고려한 단차 해소 ■ 알기쉬운 장소에 안내판과 화장실 설치, 벤치와 휴게소 설치 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구입 상품에 대한 배달택배서비스 실시 ■ 쇼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쇼핑 대행서비스 실시 ■ 노인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는 이동판매서비스 실시
점포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이 나쁜 노인을 위해, 조명을 밝게 하고 제품을 쉽게 볼 수 있게 진열, 큰 글자로 유통기한 등 표시 ■ 가족이 적은 노인을 고려한 소용량, 소액제품 판매 ■ 신상품에 대한 구두 설명, 중요한 주의사항은 확대 복사 등

출처 : J-NET21(<http://j-net21.smrj.go.jp>), 특집 상점가 인터뷰(Q439.商店街施設のバリアフリー化と高齢者対策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か?), 2014.

약이나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마네현 마쓰에시의 마쓰에텐진읍상점가(松江天神町商店街)⁴⁾를 들 수 있다. 이 상점가는 중심시가지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대응한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고령자 중심의 살기 좋은 모델을 조성하기 위한 ‘天神町まちづくり委員会(텐진읍도시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마쓰에텐진읍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교류의 장 조성, 둘째, 주변 사찰과 연계성 강화, 셋째, 고령자를 고려한 상업환경 조성을 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거리만들기’협정이 제정·운영되었다.⁵⁾

[표 2] 마쓰에텐진읍상점가(松江天神町商店街)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 지원 방안

구분	내용
교류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 점포 활용 고령자 모임공간 조성(도시 복지과 시책 연계)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고령자 협의체(후레아이 플라자 협의회) 구성
주변 사찰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사찰을 활용한 제례(おかげ天神(지장보살을 모신 사찰))
고령자 상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의 날 제정 운영, 고령자용 상업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

출처: 松江・米子・境港合宿巡検報告書, 2001. <http://soc1.h.kobe-u.ac.jp>

4) 松江天神町商店街, 2015. <http://www2.crosstalk.or.jp>

松江天神町商店街のお年寄りに優しいまちづくり, 2015. <http://www.oirak.jp>

5) 이상준(2012),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4.

2)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 사례

■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 사례

다양한 상점가에서 고령자를 위한 도시락배달, 만남카드 제작·활용(고령자를 위한 가맹점이나 할인, 경품 행사 활용) 등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미에현 구와나시의 데라마치도리상점가(寺町通り商店街)⁶⁾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와 상점가, 상인 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한 소비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한 만남카드를 제작·활용하고 있다. 만남카드는 고령자 전용 카드로 상점가 내 가맹점에 대한 할인이나 경품 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시가현 나가하마시의 키노모토북국가도상가(きのもと北国街道商店街)⁷⁾에서는 “안심도시 키노모토” 구현을 목표로, 상점가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조성한 챌린지 스텝을 활용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식사 공간 제공 서비스”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전과 고령자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고령자 전용시설 조성을 통한 고령자 친화형 상점가 조성 사례

고령자 맞춤형 소규모 슈퍼마켓(핵점포 등) 설치, 지역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센터 등) 등을 상점가 내부에 조성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전용복지시설 조성은, 대표적으로 시마네현 마쓰에텐진읍상점가(松江天神町商店街)⁸⁾를 들 수 있다. 지역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휴식공간(まめな館)”과 “보건의료복합커뮤니티시설(いっぷく亭)” 설치, “고령자 공동주거시설(安心ハウス)”를 운영⁹⁾하고 있다.

야마구치 현 호후시 텐진초긴자상가(天神町銀座商店街)¹⁰⁾에서 상점가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방문과 숙박을 결합한 소규모 다기능 노



〈그림 1〉 마쓰에텐진읍상점가 まめな館 전경
출처: 松江天神町商店街, 2015

6) mizuho, 2015,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2010/1221.html>

7) 협동조합 키노모토북국가도상가(きのもと北国街道商店街), 2015, <http://www.chuokai-shiga.or.jp>

8) 松江天神町商店街, 2015, <http://www2.crossalk.or.jp>

松江天神町商店街のお年寄りに優しいまちづくり, 2015, <http://www.oirak.jp>

이상준(2012), 전게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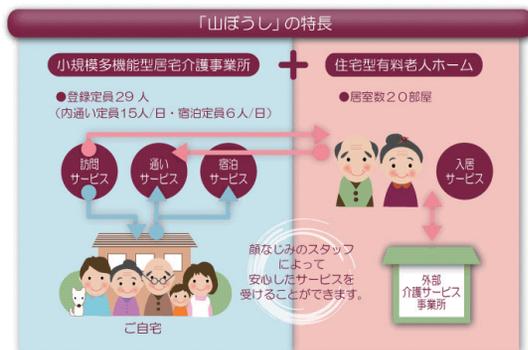
9) 이상준(2012), 전게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4.

10) mizuho, 2015,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2010/1221.html>

인유료 공동홈(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有料老人ホーム)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포괄지원센터 등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상점가 내부에 고령자를 직접 끌어들여,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활성화 및 고령자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업시설의 경우, 니가타현 산조시 산조중앙상가(三条中央商店街)¹¹⁾는 고령자의 편안한 식품 쇼핑을 위한 농산물 전용 소규모 슈퍼마켓을 상점가 내부에 설치하고, 고령자의 의견을 반영한 소품종·소량 판매를 전개하고 있다.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의 오비전신도리상점가(帯広電信通り商店街)¹²⁾에서는 지역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인·장애자와 협동·공생하는 상가” 조성을 위한 “복지 스위트로드 형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점가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숍(ミナミナ)”, “빈곤생활자 지원 시설(心音)” 등 문화·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 반찬가게(惣菜・ごはん屋でんしん)” 창업지원시설 등을 다양하게 설치·운영하여, 고령자를 단순한 소비자체가 아닌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핵심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 덴진초긴자상가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有料老人ホーム 개념도

출처: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事業所, 2015



〈그림 3〉 오비전신도리상점가 커뮤니티 숍

출처: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事業所, 2015

3. 충남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활성화 조성을 위한 제안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화수준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 전통시장은 일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촌형 전통시장으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충남 전통시장은 고령자를 고려한, 고령자에게 친밀한 전통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11) mizuho, 2015,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2010/1221.html>

12)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事業所, 2015, <http://www.syoutengai-shien.com>



1)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 자체적인 기준과 전통시장별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충남도 자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추구하는 고령자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여 충남도 전통시장이 추구하는 고령자 친화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령자의 “생활·안전, 문화·복지, 상업·경제”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전문가, 전통시장 상인 등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과정을 추진하고 필요 시 전담 T/F팀의 구성이나 관련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통시장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전통시장에 맞는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 전략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지역 인구가 비교적 많고 도시화 및 활성화수준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빈집포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예, 도시락배달 및 식사제공 커뮤니티숍, 고령자 전용 휴게센터 등)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역 인구가 적고 도시화 및 활성화수준이 낮은 전통시장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홈, 고령자 복지센터 등 고령자가 전통시장 내 거주하면서 소비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통으로 전통시장별로 지역 내 고령자를 전통시장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찾아가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상품배달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고령자 전용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고령자 전용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와 전통시장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 전략을 활용하여, 충남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정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키워드는 “특성화”, “맞춤형”으로, 충남도에서 젊은계층 및 젊은문화 적용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충남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충남도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비전을 고려하여 행·재정적으로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단계적 방향과 전략, 세부추진 과제 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충남도 내 전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의향조사를 통해,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전통시장을 발굴하고, 추진 유형(예, 도시형태-도시권, 농촌형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유형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2개소 정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후 운영·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3) 다양한 중앙부처사업의 연계를 통한 규모화 · 광역화를 도모한다.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업·경제, 혹은 문화만을 적용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년 간의 사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중앙부처사업의 연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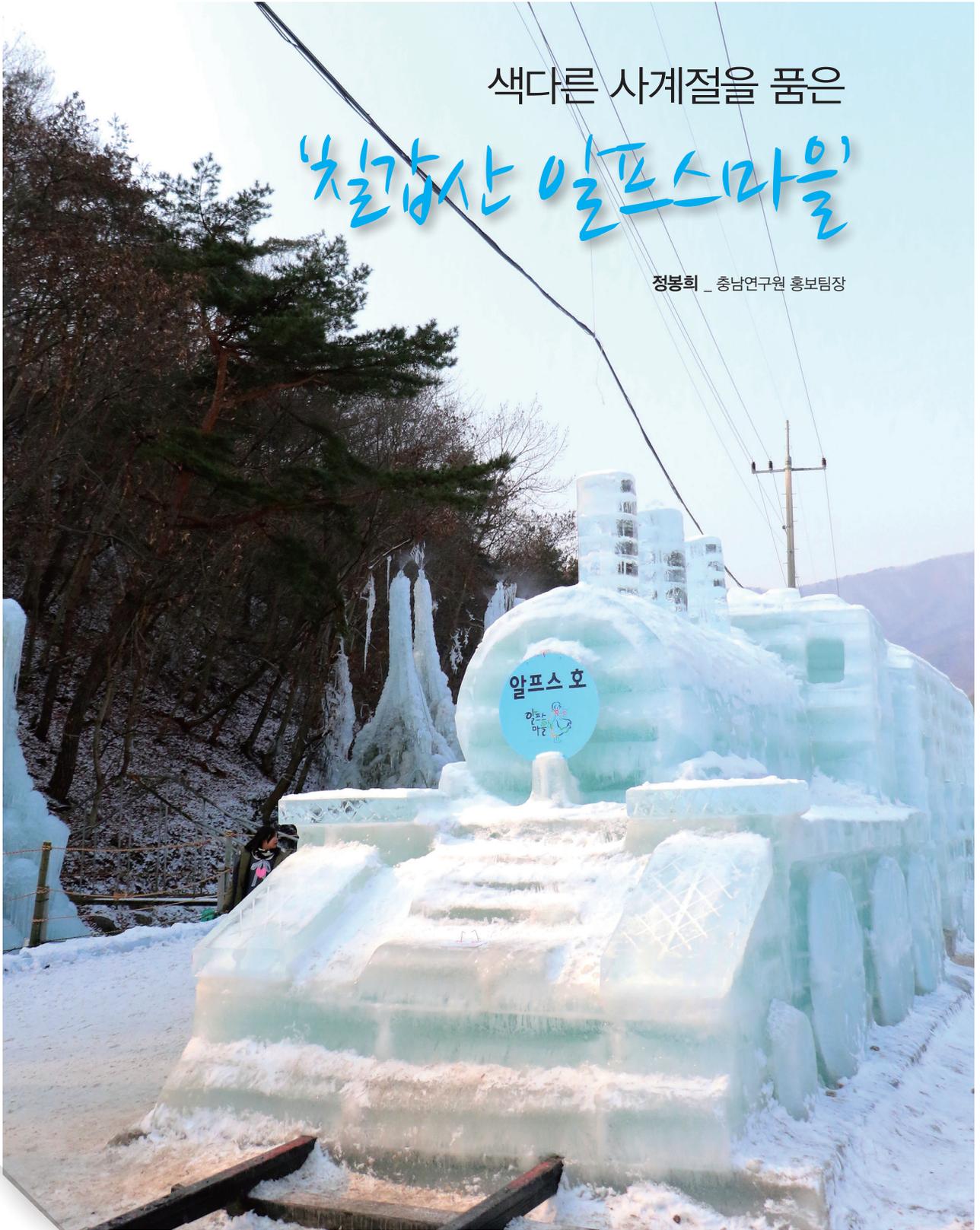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청 주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설개선과 젊은계층 유입 도모, 상인역량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보건복지부(고령자친화형기업 등) 등 다양한 중앙부처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자체의 규모화 · 광역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충남도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보건(지)소 신축, 문화복지센터 조성, 노인회관 등의 신축에 있어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내 빈점포 및 공터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지자체 단위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추진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국가 단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들이 전통시장 내부에 고령자 친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이라는 목적하에 지원되도록 행 ·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은경 외(2015),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기도 산업정책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박상익·서동우(2015), 한국 전통시장론, 한국전자도서출판
 이상준(2012),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진(2015), 일본의 신고령세대, 새로운 시장을 연다, Kotra
 행복한 가게 연구소(2015), 전통시장 상점주 상인 연령, http://blog.naver.com/help_happy
 J-NET21(<http://j-net21.smrj.go.jp>), 특집 상점가 인터뷰
 mizuho, 2015,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column/2010/1221.html>
 松江天神町商店街, 2015, <http://www2.crosstalk.or.jp>
 松江天神町商店街のお年寄りに優しいまちづくり, 2015, <http://www.oirak.jp>
 きのもと北国街道商店街, 2015, <http://www.chuokai-shiga.or.jp>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事業所, 2015, <http://www.syoutengai-shien.com>



색다른 사계절을 품은

'빛깔있는 알프스마을'

정봉희 _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알프스마을은 [치유가 있는 마을이다]”

충남 청양 두메산골에 자리한 칠갑산 알프스마을 황준환(55세) 위원장의 말이다. 마을 주민과 방문객 모두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마을로 꾸며가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필자는 올해로 제8회째를 맞은 ‘얼음분수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알프스마을을 찾았다.

원래 천장리가 ‘높은 골짜기’란 뜻인데, 마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을이름을 새롭게 지어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충남의 알프스가 칠갑산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짚혀버렸다는 것이다.

“혹시 몰라 정말 스위스의 알프스도 직접 가봤다. 사업적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현재 40가구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알프스마을. 모든 주민이 마을사업에 100%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귀농·귀촌 8가구 포함해서 말이다. 2만평 부지의 체험부지와 펜션과 민박 각3동, 그리고 도농교류센터 등이 자리잡고 있다.

황 위원장은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지 24년째,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일이 너무 재미있다”고 말한다. 12년째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유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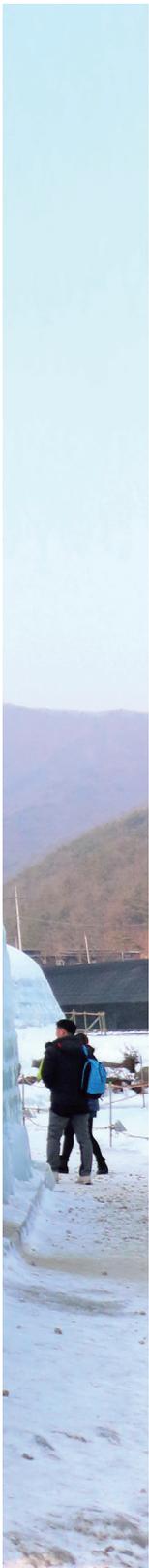
“우리 마을은 농경지도 많지 않고 특색이 별로 없다. 농한기가 길고 해도 짧게 지나가는 응달지역이다”

그런데 황 위원장은 이런 마을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런 단점을 역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마을사업을 꾸려나가게 된다. 그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바로 지난 2009년에 시작된 ‘얼음분수축제’이다.

다른 지역에서 알프스마을을 많이 부러워한다고 필자가 운을 떼자, 황 위원장은 ‘부러워할 것 없다’며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



〈그림 1〉 알프스마을 황준환 위원장





다고 조언했다.

“2004년도에 처음 도농교류사업을 시작하며 축구장을 지었다. 그랬더니 마을주민들은 ‘왜 그걸 만드냐’, ‘차라 리 건물을 하나 올리지’ 이리면서 불신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회사나 단체에서 단합대회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점차 방문객이 늘어나자 마을 주민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은 성공했지만 처음 얼음축제를 열었을 때 3천700만원이 적자였다고 한다. “이걸 누가 해결해주겠냐. 우리 가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점차 수익이 늘어났지만 이를 두고도 말들이 많았다. 결국 금전적인 이해문제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황 위원장은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마을의 문제는 무조건 회의를 거쳐 다수결의 원



〈그림 2〉 올해로 8회를 맞은 알프스마을의 ‘얼음분수축제’

칙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통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먼저 얻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러면서 알프스마을의 비전도 만들게 되는데,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는 마을, △자원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마을, △마음의 치유가 있는 마을로 정했다고 했다.

마을 주민 모두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가며 일을 진행하다 보니 지난해 총3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해 매출은 25~26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올해 1월에만 7~8만 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올해 목표는 30억. 마을 하나에 상근직이 23명이나 된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났다.

알프스마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온다. 특히 봄과 겨울엔 젊은 층과 외국인이 많고 여름과 가을에는 중장년층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당일 코스가 많긴 하지만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40%, 충청권 40%, 전라도 15%, 기타 5%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이런 다양한 마을사업들을 통해 지난해에만 약 6400명의 일자리(일용직)를 창출시켰는데. 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만 2대1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마을사업을 하는 대표의 꿈 중의 하나는 바로 사계절 대표 축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닐까? 계절에 따라 비수기가 있어서 편차가 심할 경우 마을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프스마을은 그런 의미에서 꽤 진척된 곳이다. 봄-뷰티페스티벌, 여름-세계조롱박축제, 가을-칠갑산콩축제, 겨울-얼음분수축제로 이어지는 사계절 색다른 모습을 기대해도 좋겠다.

이 중 2011년도부터 시작된 세계조롱박축제는 4km로 조성된 세계의 다양한 희귀 조롱박과 300여점의 박 공예품, 그리고 박탕수, 박칼국수 등 특색 있는 조롱박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행사 등 지원자원을 제대로 활용한 이색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이 작은 박들이 '대박'을 치기 시작했단다. 박에 이름을 새겨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수능 대박 페스티벌', 박숙을 이용한 화



〈그림 3〉 사계절 지역자원을 활용한 알프스마을의 축제
자료: 알프스마을 제공



〈그림 4〉 뷰티페스티벌을 설명중인 황위원장

자료: 알프스마을 제공

장품 개발 제안 이후 자리잡게 될 ‘뷰티페스티벌’ 등이 그것이다. 오는 2017년부터 ‘미용’을 테마로 한 뷰티페스티벌은 박속을 이용한 화장품 전시·판매, 중국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마을 폐교를 이용한 뷰티센터를 지어놓은 상태이며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을 800여명 유치했다. 황 위원장은 “솔직히 밤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화장품 파는 게 더 이득 아닌가. 앞으로는 6차산업화가 대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축제로 자리잡은 칠갑산 콩축제 역시 지역자원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어느 날 옆 마을에서 두부를 만들어 파는데 판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보고, 함께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것. 2014년부터 시작한 이 축제는 마을 45개 농가가 참여해 만든 자체적인 행사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다.

가을축제로 자리잡은 칠갑산 콩축제 역시 지역자원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어느 날 옆 마을에서 두부를 만들어 파는데 판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보고, 함께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것. 2014년부터 시작한 이 축제는 마을 45개 농가가 참여해 만든 자체적인 행사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마을은 사계절 축제뿐만 아니라 마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현명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마을을 이끌어 갈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루아침에 리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필자는 물어봤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 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가 있다면? 그랬더니 즉시 당진 백석올미마을의 김금순 대표를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도농교류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농농교류도 2곳과 진행 중이다. 백석올미마을(2015. 8 자매결연)이 그 하나다. 김금순 대표는 지역의 자원을 너무나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과 함께 그러가는 미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체험용 엿을 만들기 위한 엿 재료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마을이 좋다는 말은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일을 잘 꾸려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잘 나가는 마을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이 활력을 찾기도 하지만 다른 한곳에서는 오히려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하는 것이다.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대표들의 역량과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알프스마을의 로고는 ‘하이디’를 형상화한 그림으로 만들어졌는데,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딸에게 ‘하이디’ 옷을 입혔던 것이 계기로 되었다고. 그 어린 딸이 지금은 마을과 함께 성장했고 그 스토리는 모 방송사에서 다큐멘



〈그림 5〉 세계조롱박축제 모습





터리로도 제작되었다. 어느 하나 흘러 넘기는 것이 없는 황 위원장의 이런 마음... 필자는 '사랑'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도 잊지 않았다. “농촌은 활력이 넘쳐야 한다. 곧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를 성공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농촌을 바라보는 마음은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이다. 3800만원 적자에서 30억 매출로 전환시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농촌다움이라는 마을공동체문화를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





〈그림 6〉 알프스마을의 ‘농촌다움’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짐
자료: 알프스마을 제공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년, 아쉬움 속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며...

이상신 _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1. 시작하며

2015년 3월 27일 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충남연구원 산하기구로 설치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개소하면서, '충남도가 서해안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전하고 있다.

중도일보

2015년 03월 30일 (월)
14면 지역

서해안 기후변화 대응체제 본격가동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개소
도 환경복지구현 앞장 기대

충남도는 27일 내포신도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신청사에서 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김기영 의장, 대전기상청장, 도와 시·군·환경 담당 공무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은 경과보고와 현판식, 사무실 방문, 심포지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소식에서 허 부지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지역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권원대 박사가 '선진국 기후



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신청사 개소식이 지난 27일 내포신도시 내 현장에서 열린 허승욱 정무부지사,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변화 정책 동향 및 대응'을,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박사가 '충청남도 기후변화 현황과 과제'를, 최진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가졌다.

최진하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 대

응 기반 조성, 연안·물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도민 환경 복지 구현 등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산하 기구로 설치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내포신도시 업무시설용지 2258㎡의 터에 지상 2층, 연면적 989㎡ 규모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교육운영팀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내포=박갑순기자 photopgs@

18.5 X 15.3 cm

[연구소개소 관련 언론보도_중도일보, 2015. 3. 30.]



하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2016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본격가동을 위한 준비 중은 아닌지 하는 아쉬운 마음과 개소식 당시 충남도민의 바람인 충남지역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물어 보게 된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는 2개의 센터가 소속되어 있으며, 출범한지 10년을 바라보는 물환경연구센터와 달리 연구소 개소와 함께 출범한 우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업을 함께 안고 2015년을 보냈다. 설립당시 주어졌던 역할과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하고, 충남도 산하 여러 조직과 중복된 기능부분에 대한 조율에 지난 시간을 보냈다면, 2016년은 설립 당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기능을 다시 찾아보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한해라 생각된다.

2.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역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내 센터들은 중간조직의 역할과 더불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센터로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기후변화대응 정책개발과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 개발을 통해 충남도의 차별화된 중부권 기후변화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 역할을 통해 지역기반 기후변화·환경 DB 축적으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며, 지역으로부터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역할]

(1) 기후변화대응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 시·군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기업 배출권거래 지원 - 탄소상쇄 프로그램 지원 - CDM, VCS 등 등록지원 - 지자체 탄소배출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기후변화 지원단 운영 - 충남 기후변화 적응 자문단 구성 - 충남지역 기후변화 적응사업 발굴 	



(2)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후생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산, 칠갑산 등 기후변화 생태모니터링 - 충남 해안 기후·생태 모니터링 - 주요하천 및 호수 생태변화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해안 평균수면 상승추이 장기 관측 - 연안침식 및 해안선변화 등 해빈환경 변화 모니터링 - 충남 연안역 기상 및 해양의 정기적인 관측자료 생산 - 화력발전소 온배수 유출에 따른 인근해역의 환경생태변화 모니터링 	연안해안 모니터링	
산업시설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주변대기환경 변화 모니터링 - 산업단지 주변 대기환경 변화 모니터링 - 농·축산 단지 환경영향 모니터링 	

(3)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지역 기후변화 교육 - 충남 기후변화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기후변화 정책제안 활성화 	
홍보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정보제공 기관간 협력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정보포털 시스템 구축 - 환경정보 시스템으로 확대운영 	
교육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지역 기후변화 강사진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교육교재 발간 - 시·군별 기후변화 교육 지원 	
네트 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후변화 정기포럼 개최 - 지역 기후변화 정책공유 - 지역 기후변화 전문가 인력풀 구축 	

3. 아쉬움의 2015년

지난 2015년 3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2명의 연구원으로 마치 광활한 대지에 위태롭게 홀로 서서 열정만 가진 이상주의자의 마음으로 출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연구원 내부를 비롯한 연구센터 외부현황 파악이 미진하여 혹독한 조율의 시기를 거쳤으며, 가을에는 구성원을 7명까지 늘이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년, 아쉬움 속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며...

연구센터의 길을 찾아 열심히 달렸다. 겨울을 맞아 설익은 과일을 수확하듯 연구결과물을 급하게 거둬들이고 다시 한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업은 연구센터 출연금 교부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개월에 걸쳐 충청남도청내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 실·과나 팀과 정기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20여건의 연구과제와 10여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10여건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 6월에는 연구원 본원의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7월에 출연금 목적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5년 이내에 달성할 연구센터의 5대 단기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 연구 기반확립

→ 연구소 기초연구자산 확보 및 인프라 확충

□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반조성

→ 충청남도 기후환경 영향 모니터링 추진

□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지원체계 확립

□ 기후변화 인식제고 향상

→ 충청남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사업추진

□ 충청남도 기후변화 정책 Think T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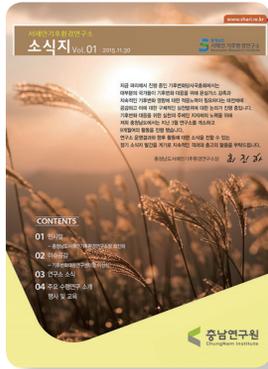
→ 지속적인 충청남도 기후변화·환경 정책지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단기목표]

연구기반 확립을 위해 충남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Prototype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대전지방기상청과 연구원간 MOU 체결을 추진하고, 충청남도 기후변화 100년 발간 및 다수의 관련 논문게제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반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기후변화 모니터링 계획 수립, 충청남도 연안환경 관리방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권 실무협의체 운영계획 수립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위한 연구를 통해 충청남도 1호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을 마쳤다. 기후변화 인식제고 향상을 위해 충남지역 기후변화 교육 운영방향 수립연구와 더불어 초등학교 기후변화 교육과 기후변화 공개강연회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기후변화 정책 Think Tank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현안과제를 지원하고 충남의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충남기후정보브리핑을 창간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연구소 소식지를 창간하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활동과 관련 정보를 충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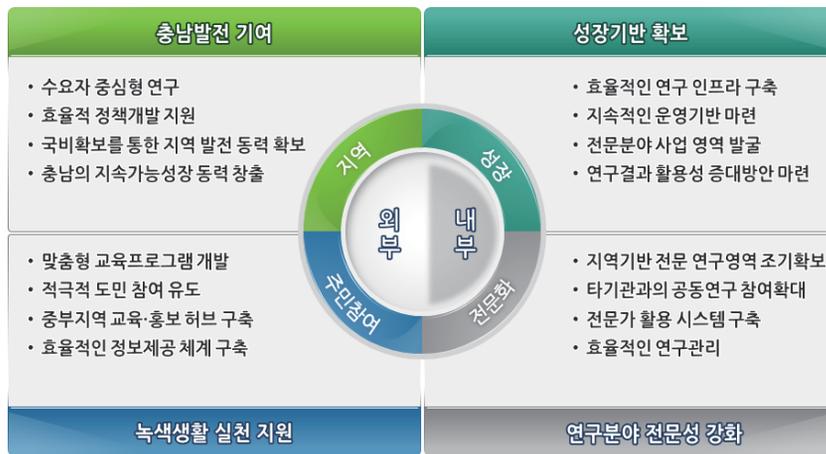
[2015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활동]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년, 아쉬움 속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며...

2015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활동들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란 단어를 되새기고 싶다. 물적, 인적면에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세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 한발 앞선 정책제안이 미흡했던 점, 둘째 연구원 본원과의 물리적 거리 등으로 원내 정보공유 부족, 마지막으로 센터 자체 발간물이나 보고서에 대한 연구질 관리가 아쉬웠다.

4. 2016년 새로운 도전

2016년은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따른 국제사회 기후변화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감축목표 설정과 국가에너지 신산업 육성계획 발표에 따른 국가적 현안에 대응해야할 시기이다. 또한, 충남도내에서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과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 주변 기후변화 모니터링 원년으로 본격적인 기후변화(연안 포함)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된다. 이처럼 국제적인 현안과 국가사업 대응, 더불어 충남도의 관련 사업 지원이라는 본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015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한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리센터에서는 이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기반 기후변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동력확보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발전전략]



2016년에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5대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 기반확립] 연구소 기초연구자산 확보 및 인프라 확충

- + 기본과제 수행(기후-회복경로 적용 등)
- + 기후변화에 따른 충남 시군별 가뭄전망
- + 충남 연안역 기후변화 적응방안 연구
- + 충청권 기후변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 유관기관 MOU 추진

[기후변화모니터링 기반조성] 충남지역 기후변화 관련 모니터링 추진

- +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 영향평가 연구 수행
- +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 + 충청남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관련 계획 수립 지원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충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지원체계 확립

- + 시·군 공공부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평가 지원
- + 배출권거래제 등 충남 온실가스 감축 지원(탄소상쇄, 대응계획 수립 지원)
- + 충남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가이드라인 제작
- +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지원

[기후변화 인식제고 향상] 충남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사업 추진

- + 충남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 충청남도 대학생 기후변화 적응 서포터즈 운영
- + 기후변화 홍보 행사 유관기관과 공동 개최
- + 연구조성 사업(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수행
- + 연구소 소식지 정기 발행

[충남도 기후변화 정책 Think Tank] 지속적인 충남도 기후변화 정책지원

- + 충남 기후정보 브리핑 발행
- + 도정 현안과제 지속적인 지원

5. 마치며

2016년 기후변화분야는 기존 교토의정서체제와는 전혀 다른 신기후체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분야만 살펴보더라도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할당 하던 방식에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스스로 결정하여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결정하고 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新 기후체제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감축, 적응, 재정 및 기술이전 등)
감축대상국가	37개 선진국 및 EU	195개국 선진·개도국 모두 포함
감축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할당	상향식(bottom-up)각국 스스로 감축목표 결정 (INDC제출)
적용시기	1기 교토협약 기간: 2008~2012년 2기 교토협약 기간: 2013~2020년	2020년 이후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제출하여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기후변화 완화분야에서는 지자체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출범하기 전 충남도에 있어 기후변화문제는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출범 이후에는 기후변화를 미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센터가 충남도의 희망을 준비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응답하라, '시골' 환경운동연합!

창립 6개월 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¹⁾ 이모저모

신은미 _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해비탈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시골에 무슨 대단한 일 있다고?”
 “시골에서 무슨 환경운동이야, 그런 것도 사람 많은 서울에서 해야지.”
 “출구석에 환경단체 하나 생겼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활동비나 제대로 나오는 거야?”
 “혼자, 게다가 차도 없이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거야?”
 “활동은 그럭저럭 한다고 해도 무슨 재미로 살려고?”

환경운동을 핑계로 시골로 간다고 했을 때, 가까운 친구들이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단 악담에 가깝죠.) 그래도 용감하게 환경연합행(行)을 감행했던 건, 환경운동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많고 문제 많은 도시에서 아등바등 사느니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이나 일구며 여유롭게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은 꽤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이죠. 환경연합 인연으로 홍성으로 내려온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조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같이 살펴보실래요?

“해비탈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시골에 무슨 대단한 일 있다고?”

‘대단한 일’, 시골에 더 많답니다. 예산 대술면에는 전국 최대규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려고 하고 슬로시티 대흥면에는 마을을 동강내며 고속도로가 건설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 이하 '환경연합'



라 최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인 광천에서는 장항선 개량사업을 위해 석면광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합니다. 예산, 홍성 어디랄 것도 없이 자꾸만 커지고 많아지는 축사 때문에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악취가 진동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농공단지 화재사고로 유독가스가 다량 누출되었는데도 행정과 사업자가 누장대응을 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고,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물을 끌어온다는 믿기 어려운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현장조사 다니며 좀 더 공부를 해보면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우리 사회의 치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문제들을 안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산과 홍성 일도 많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대단한 일’ 투성이입니다. 한 지역의 수준이 충남의 수준일 수밖에 없고, 같은 권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까이 인접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령으로 가려던 화상경마장을 기껏 막아놨더니, 홍성으로 온다고 하고, 그걸 또 막아놨더니 예산으로 오려고 합니다.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위에 폐기물처리장이 지어지면, 예산 대솔면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고,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에 무심하면, 충남 전체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송전탑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환경운동이야, 그런 것도 사람 많은 서울에서 해야지.”

‘사람 많은 서울’ 먹여 살리느라 지방, 특히 시골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뭐든 가져가고, 어디든 개발하려고 합니다. 도시였다면 벌써 길길이 난리였을 일들이 여기서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알아도 별 도리 없이 당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 없고, 인구 적으면 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막상 시골 살아보니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형 개발사업인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말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보다 도로계획이 상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과 강을 파헤쳐 좋은 자리에 떠억 하니 스마트휴게소란 걸 지어 도시민들이 관광을 오게 하겠답니다. 도시중심적으로 설계된 도로와 철도가 완성되면 젊은이들, 좋은 자원들이 더 쉽게 유출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홍성군은 ‘축산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축사육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 그렇습니다. 축사 없는 마을을 찾아보기 힘들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산된 고기요? 많은 양이 도시로 가지요. 가축을 사육하면서 생기는 분노와 오염물질, 도살 후 생기는 내장이나 피 등은 고스란히 두고 고깃덩어리만 말끔하게 포장해 가져갑니다. 물과 토양의 오염정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축사 주변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충남 서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 전기생산량 가운데 충남 사람들이 쓰는 건 반도 안 되는 거

2) 충남의 에너지지급률은 266%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다들 아시죠?)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고 생활권 가까이 고압송전탑도 뻗뻗합니다. 지역에 남은 건 미세먼지와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 수많은 동식물들의 고통입니다.

예산의 한 산은 채굴업자가 흙과 돌을 다 파내어 봉우리가 사라지고 맥도 끊겼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 지다 못해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흙과 돌은 (예산에서도 일부 사용하겠지만) 주로 대전이나 천안 같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시골은 이렇게 도시에 흙과 돌, 산까지 빼앗겨 시골다운 맛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서울이 가장 깨끗할 거라는 웃지못할 농담도 떠돕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 대술면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전국 최대규모입니다. 좋은 것은 다 가져가면서 더럽고 위험한 것만 지방으로 보냅니다. 충남에서는 예산 말고도 청양, 서천, 부여, 서산에서 각종 폐기물 처리장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가 아닌 시골이 동네 복인가요? 농산물, 에너지, 사람까지 빼앗기고 유해시설, 기피시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환경운동, 시민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지요? 인구 적고 논밭 많은 충남은 활동가들에겐 여전히 할 일 많은 '블루 오션'³⁾입니다.

“충구석에 환경단체 하나 생겼다고 뭐가 나아지?”

환경단체 하나 생겼다고 금세 뭔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7월 창립 이후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170여 명의 회원들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연합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할 기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기회도 없었겠지요. 핵발전소와 4대강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이에 이에 버금가는 지역 현안들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경연합은 중앙의 환경이슈들을 지역과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영덕주민투표 현장에 지원도 가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한 청원도 받습니다. 멀리 있는 문제 같지만 실은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함께 공부하고 생활 가까이에서부터 해결해나가는 겁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도청 앞 용봉산에도, 골프장을 여러 차례 막아냈던 가야산에도 케이블카가 생기지 말란 법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가뭄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수계가 다른 보령이나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환경연합이 느리게나마 지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다른 단체들에게 힘과 생기를 주는 것도 같습니다. 자기 분야의 일이 아니어도 지역에 필요한 일이라면 모일 수 있는 테이블도 생기고요. 잠자던 단체를 깨우기도 합니다. 청양이나 서천에서도 회원가입을 해주신 덕분에 이웃지역 사정도 살피게 되고 정도 돈독해집니다.

3) 여기서의 블루 오션은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영역'인 동시에 '우울함의 바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응답하라, '시골'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 생기고 가장 나아진 것은 바로 제 삶입니다. 도시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와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겨울에라도 냉장고 코드를 뽑아볼까 고민하고 유명한 중앙활동가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지역활동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을 조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고기를 덜 먹게 되고, 생활폐수가 하천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안 다음부터는 라면국물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활동비나 제대로 나오는 거야?”

예산홍성환경연합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라 재정이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연합을 만들고자 초기에 애쓰신 20여 분을 시작으로 170명의 회원이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2만 원씩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하십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농촌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와중에 회비로 내주시는 5천 원, 1만 원은 도시에서의 5천 원, 1만 원과는 질이 다릅니다. 도시에선 커피 한두 잔 값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선 우리밀이 3kg, 유기농쌀이 3kg, 유기농사과가 열 알입니다. 여름내 땀 흘려 농사지어 번 돈, 환경연합처럼 어렵사리 단체를 꾸려가는 동료활동가들의 돈이 회비라고 생각하면 허투루 쓸 수도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회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가난할지언정 작은 단체가 어떻게 든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회비가 넉넉진 않고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⁴⁾, 가끔 현수막도 달고, 회원모임도 조직하고, 조사사업도 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 월급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비상근으로 일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지역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는 운영위원님들은 모두 무급으로 일하고 계셔서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최근에는 운영위원이자 회원이신 지역 농부님께서 수익금 전액을 환경연합에 쓰라며 사과즙 100박스를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책 사볼 돈 없을까봐 책을 선물해주는 분도 계시고, 직접 짠 들기름, 농사지은 쌀을 주시기도 합니다. 밥과 술은 수도 없이 얻어먹었습니다. 도시활동가들보다 월급은 적을지 몰라도, 도시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혼자, 게다가 차도 없이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거야?”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혼자, 차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자면 지치기도 합니다. 활동범위가 예산과 홍성 두 지역이고 단체 설립 초기인데다 현안이 많은데, 상근자가 한 명이니 힘들 수밖에

4) 충남의 환경연합들(충남환경운동연합)도 막내단체가 창립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부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 보다는 '나눔'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일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 일은 어찌어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고맙고 신기한 일이지만, 지속가능한 활동, 건강한 지역조직을 위해서는 빨리 동료활동가를 구하는 게 상책이겠습니다.⁵⁾

차가 없는데 충남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니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환경현안이 있는 곳은 유독 멀거나 외진 곳입니다. 하지만 막상 누가 차를 그냥 준다고 해도 로드킬, 에너지문제, 신규 고속도로 건설 등 자동차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현장에서 자주 접하다보니 맘 편히 차 몰고 다니기는 진작에 틀렸습니다. 이리저리 고민하는 사이, 저는 충남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꽤나 전문가가 되었고 차 있는 분들께 당당하게 신세를 지기도 하며 출장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⁶⁾

혼자 일하는 것, 차 없이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현안에 대응하느라 환경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든 시골이든 환경과 관련 없는 일은 거의 없고, 바쁘지 않은 환경단체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큼지막한 현안들 외에도, 밭에서 비닐 태우는 것부터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문제, 먹거리 안전,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설치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축하듯) 현안을 찬찬히 챙겨나가다보면 일도 줄어들고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것도 결국은 하나하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조금 힘이 조금 가시긴 합니다.

“활동은 그저저럭 한다고 해도 무슨 재미로 살려고?”

시골 사는 재미로 살려고 합니다. 바쁘더라도 짬을 내, 시골집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난 것들로 동네친구들과 부침개에 막걸리도 한 잔 하는 재미 말입니다. 생태화장실에 모은 똥과 오줌으로 거름을 하고 작물들이 쑥쑥 크는 걸 보면 환경운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에 가깝게 살아야 자연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텃밭이지만, 내가 먹을 것을 가꾸고 이웃과 나누는 재미, 환경운동의 본질과도 같은 자급과 공동체정신에 대한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농촌에 있는 환경연합은 신기하게도 농사일정을 따라갑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같은 농한기에는 사무국도 한가하고 바쁜 모내기철이나 김매기철에는 사무국도 덩달아 바빠요. 지역과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면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사실, 농촌에 있는 환경연합은 농촌스럽게 활동해야 한다고 사실을 철이 바뀔 때마다 깨닫습니다. 바쁜 철엔 아무리 중요한 얘길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강연자리를 마련해도 오지 않습니다. 대신 농한기에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삼삼오오 모여 자연스럽게 현안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절 바뀌는 재미, 철에 맞게 사는 재미도 상

5) 혹시나 이 글을 보고 함께 환경운동 해보자고 나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6) 본 지면을 빌어, 차 없는 활동가에 대한 배려, 자발적 카풀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응답하라, '시골' 환경운동연합!

당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해온 선배님들, 환경연합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존경해마지않던 유기농농부도 한둘이 아니고, 냉장고 안 쓰는 생태미술가, 귀농20년차 생태딛간 전도사, 삼푸는 안 쓰는 노푸족 청년 등 가까이 있는 생활형 환경운동가들은 전업활동가인 제게 재미를 넘어 신선함을 선사하죠.

자연의 일부로서 '순리대로-자연스럽게' 사는 재미, 그 재미야말로 제가 왜 시골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자연스럽게' 살 책임과 권리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시골'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은 2015년 7월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적으로는 환경연합 52번째, 충남에서는 천안·아산, 당진, 서산·태안에 이어 네 번째 지역조직이 되었습니다. 16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활동소식은 facebook.com/yshs.kfem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홍성사무국은 홍동 마을활력소에, 예산사무국은 예산NGO센터에 두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041-634-2014)으로 연락주세요.





사회적기업가로서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들



최영준 _ (주)나눔커뮤니케이션 대표

2011년 가을 충남지역 사회적기업들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에 초대된 것이 사회적기업을 알게 된 첫 기회였다. 기업이라는 조직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기관인 사회적기업. 당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천안시와 진주시 형태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온라인쇼핑몰 홍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블로그 등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직업훈련 교육사업을 하고 있던 시기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기업의 접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나눔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홍보마케팅이라는 사업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홍보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하며 2012년 3월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2014년 3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경영에 있어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가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아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자 적어본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리더십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인 기업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명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운영 첫해는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고, 사회적경제란 무엇일까를 학습하며 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충남연구원의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세미나부터 충남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충남사회적경제 프로보노 교육 등 거의 모든 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충남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교류까지 참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간이 1년이 지나 2년 정도 흘렀을까? 조금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해 개념들이 확립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고 아직도 뚜렷하게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며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와 무관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만들어 내고 그 수익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사회적기업은 연대라는 정신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특히 연대라는 표현과 개념을 선배 사회적기업가에게 들은 그 날 이후론 늘 그 연대의 정신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 간 교류 시에 되새기곤 한다.

하지만 대표자의 이러한 학습노력과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른 영역이었다. 근로자들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에 대한 이해 역시 사회적기업으로서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종사자 교육, 현장방문 교육과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근로자 교육과 행사에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매월 1회 근로자 월례회의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각들이 경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며 운영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 정립과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정과 더불어 필요했던 것은 기업으로서의 조직 유지를 위한 수익활동인 영업활동이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이라는 서비스 아이템인 나눔커뮤니케이션은 아직은 부족한 근로자들의 역량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영업보다는 관계에 의한 영업활동을 선택하였고 그에 대한 실행이 잘 수행되었다 생각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주요 거래처를 확보하며 기본적인 온라인홍보마케팅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온라인쇼핑몰 운영사례로서 발표 기회를 통해 교류하며 진행하게 된 홍성 한국 도라지 및 천안 농수산물유통사업단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운영, 온라인홍보 경험은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바로 연대라는 것으로 인해 나눔커뮤니케이션의 안정된 시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천안을 비롯한 충남 전 지역 다수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나눔커뮤니케이션에게 온라인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의뢰하며 근로자들의 역량과 나눔커뮤니케이션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게 있어 연대와 네트워크 활동은 필수라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역량 개발이라는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는 늘 부



죽한 부분을 같은 사회적기업 간 연대를 통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경영활동이라 생각하며, 새로 시작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들에게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나눔커뮤니케이션은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보다 더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천안영상미디어센터와 협력하며 매월 블로그마케팅 무료 교육을 실행하여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과 소상공인, 그리고 천안시민들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였고, 천안시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온라인홍보 용역수주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 2015년 드디어 관련 용역을 수행하며 천안시청의 온라인홍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공공 용역 추진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 수행과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잘 추진된 좋은 마케팅 계획이었다 생각한다.

어느 정도 초기의 구상대로 일이 진행된 나눔커뮤니케이션은 사회공헌차원에서 다음 목표로 충남사회적경제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충남사회적기업 쇼핑몰 구축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충남 지역내 나눔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한 경력단절여성 온라인홍보마케팅 회사가 추가적으로 설립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충남 사회적기업들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한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통하여 충남사회적기업들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사실 개별 기업들의 온라인홍보 서비스를 수행하며 개별기업과 협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러한 생각은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판로지원센터 설립과 더불어 추진되었고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충남사회적경제 공동쇼핑몰인 '따숨몰'이 탄생되어 그 운영과 홍보의 실무 역할을 나눔커뮤니케이션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홍보와 판로개척은 해당 조직의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요소이다. 어떤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해도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비인증기간 이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으니 처음 시작하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가치를 위한 활동과 더불어 수익활동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활동의 계획과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자들의 교육 및 역량강화에 꼭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구성과 역량개발 그리고 유지

영업활동에 이어 사회적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를 말하자면 근로자들의 구성과 역량개발 그리고 유지가 아닐까 싶다. 사회적가치를 위한 사회적기업이라도 해당 기업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역량개발비, 개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위한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산출물을 위해 근로자들은 주어진 일을 진행해야 하며 그 흐름속에서 경영의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 개발과 인적자원관리는 필수지만 참

으로 어려운 영역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시기에 기초컨설팅을 통하여 인사노무 컨설팅을 받기는 하지만 근로계약과 근태, 연차 및 퇴직금등의 기본적인 행정사항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지속영업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더불어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가 퇴사와 연결되며 다른 더 좋은 회사로의 근로자 이직으로 인한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의 매몰 및 근로자간의 사회적가치와 협력에 대한 교육과 가치의 공유로 인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간의 불신 및 경쟁, 상호간의 의견대립에 대한 문제 초기에 생각지 못한 경영에 있어 애로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라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수익창출을 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공통된 사항이 아닐까 한다. 여하튼 사회적기업가는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 및 이해하고 근로자의 관리와 역량강화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활한 생산과 영업활동을 위해 조직의 구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퇴사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수행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새로운 신규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구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놓지 못한다면 적시에 근로자 이직으로 인한 신규고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접는 사례들도 가끔 나타나곤 있으니 반드시 신규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외 신규 고용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역량개발을 위한 체계 역시 내부에 마련을 해놓아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자금조달과 회계의 어려움

사회적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일 것이다. 매출이 발생해도 현금으로 전환되어 기업에 들어오는 일정기간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는 더욱 자금조달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작하는 시점에도 그렇지만 늘 적어도 18개월 또는 2년 정도의 현금흐름을 감안한 조달이 필요하다고 보통 이야기 된다.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로서 협동조합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경영해본 경영자로서 협동조합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본금을 사회적기업 경영자가 책임지고 조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형태는 다소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로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사실이다. 좋은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회적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진행했던 것이 결국 사회적기업가에게 경영에 대한 의존과 더불어 자금조달의 책임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담감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근로자분들이 동의해주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여하튼 사회적기업 자금조달의 방법으로는 후원금, 기부금과 더불어 금융권의 정책자금 대출 예를 들



어 충남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만기일시 상환형태로 저금리의 이자만 지불하는 형태의 자금조달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의 경우 연대보증의 문제와 모든 이사의 신용조회 등의 절차에 있어 다소 주식회사의 절차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미리 해당기관에 문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벤처기업 및 사회적경제 자본조달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소액투자중개업이 자본시장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소비자 또는 대중들에게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하여 투자를 받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상품후원형 등 금전적인 보상부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연계형으로 제도가 개선되며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대중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회적기업들도 직접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볼 것을 권하고 싶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사회적경제 차원의 정책 역시 수립되어 진행되기를 제안해 보고 싶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금조달을 해결함에 있어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관리회계적인 면이다.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면서 현금 수입이 얼마나 되며, 어떤 사업분야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지, 또 인건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와 퇴직금, 기타 설비 등 감가상각에 따른 자본재 구입은 또 언제 필요한지 등등.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리 역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관리회계라는 부분은 참으로 어렵고 관련 전문가를 근로자로 채용한다거나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을 (예비)사회적기업들에게 추천해 본다.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이다. 사회적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수익 활동 외에 필수적으로 꼭 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활동중에 하나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역시 연구개발 영역에 대한 조직차원의 고민과 실행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 경험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창업초기 연구개발은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산학협력이라는 방법론의 활용이 매우 적절하다. 지역내 또는 관련 사업분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과 연관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시도를 하며 조금씩 경험을 늘려가면 좋을 것이다. 산학협력은 쉽게 이루어지려면 기업과 협력대학의 다양한 교류가 필수적이며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입장이 있고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며 진행하고,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산학협력을 통하여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 좋다고 생각되니 창업초기 및 산학협력 미 실행 사회적기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꼭

인지하고 꾸준히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추진하기를 바라본다.

또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 등 일반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그 성과로서 진행되는 인증에 대해서도 고민해봐도 좋을 것이다.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제품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 차원의 기술에 대해서도 인증을 진행하며,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의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농식품 제조 분야등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논산의 궁골식품과 좋은마음, 서산의 이든밥상 등 사회적기업들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성장과 유지에 대한 고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을 경영한지 4년이 되는 지금 앞으로는 어떠한 것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또 시작이 되었다. 어느 정도 갖추어진 조직과 개발된 구성원의 역량 그리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방법론과 경험들을 토대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정도에서 만족하며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이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안정된 상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사회적기업이 지속경영 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 등등 사회적기업 경영자로서 갖게 되는 이 불안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해결 방향이 있을까?

2011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배우고 토론하며 하나씩 알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민이다.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 모르며 행정처리도 미숙하여 하나씩 실무적으로 해결하며 보람을 느끼던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 생각이들 정도이니 이러한 고민에 대한 출구는 꼭 필요하다 생각된다. 충남사회적경제 정책차원에서 이 단계의 사회적기업가와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투명한 경영관리를 위해 경영공시제와 윤리경영 등에 대한 추진들과 더불어 창업초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기들의 사회적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또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와 소개들이 공유되어지면 어떨까 한다.

맺음말

기업이라는 조직형태와 방법론을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달성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기업들은 그들만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가치를 이루기 위한 활동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인 영리기업들과 차별화되어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가치 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의사결정 제도에 있어서의 민주화가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의 리더십과 경영에 대한 기술이 필수라 생각된다. 하지만 사회적가치를 이루기 위한 활동가에서 또는 단지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다는 이유로 출발한 사회적기업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만의 고유한 특성과 경영적 상황들에 대해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기업가들이 현재의 기업이 처해있는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사회적기업간의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접근과 연대 정신이 더욱 퍼지기를 기대해본다. ◀





해외 리포트

일본의 중소도시
지역개발 정책

나가하마시 경주자립권 추진 현황

임형빈, 이상준 _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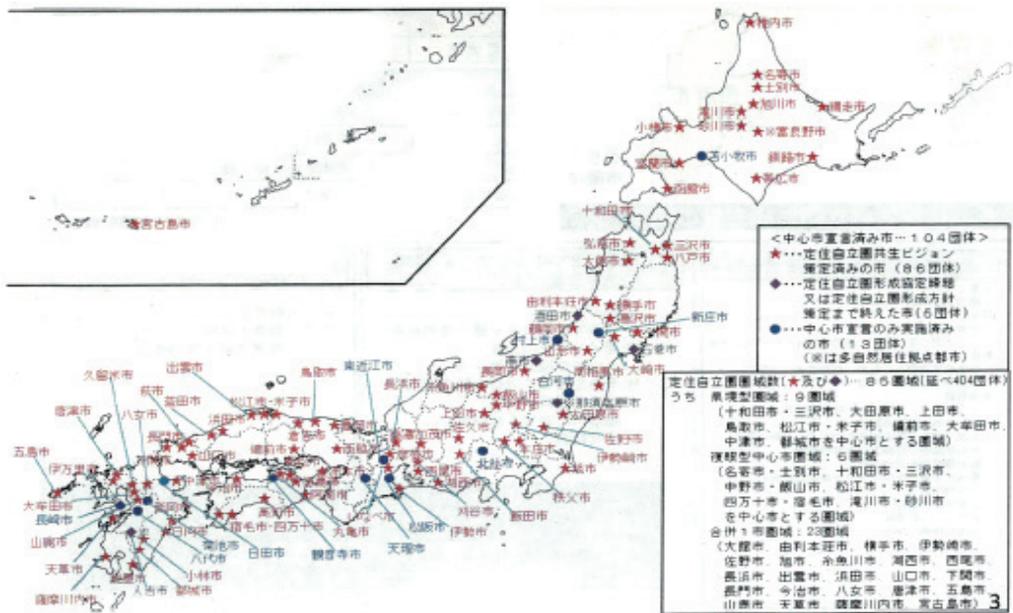
충청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 수립과 관련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 나가하마시를 방문하였다. 나가하마시를 사례 지역으로 방문한 목적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소 도시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책적으로 주변의 지역들과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공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The ChungnamReview 2016. 1 | 85

충청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 수립과 관련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 나가하마시를 방문하였다. 나가하마시를 사례 지역으로 방문한 목적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소 도시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책적으로 주변의 지역들과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공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생활권 정책과 유사한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은 2009년 도입되었다. 사업의 방식은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 입지시 관련 기능을 집약하여 공급하고, 주변 시정촌은 중심지의 집약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사례는 2015년 기준으로 총 85개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권역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계획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일본의 정주자립권 현황



■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정책 개요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은 나가하마지역을 중심지로 하여 주변 6개 마을지역(주변 시정촌)인 도로히계정, 고훈쿠정, 다카스키정, 기노모토정, 요고정, 니시아자이정, 이 하나의 시로 통합하여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권역)으로 재형성되었다. 중심지와 주변 시정촌이 합병하여 이루어진 나가하마 권역은 2014년 기준으로 면적 680.79km², 인구수 122,310명, 44천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정책의 목표는 인근 대도시 주민의 유입을 확대하고, 나가하마시 인구 유출의 최소화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기능의 강화,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 권역 관리 능력 강화 등의 3대 연계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있다.¹⁾ 주요 사업 분야로는 생활기능 강화에 관한 정책 분야로서 의료, 복지, 교육, 산업 및 관광진흥, 환경, 소방, 화장장 등이며, 시설의 공동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공공교통, 스마트교차로, 지역생산자·소비자 연계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권역의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인재 양성, 인사 교류, 컴퓨터 시스템 공동개발 및 구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으로는 보육사업, 지역의료 지원 시스템, 학교급식센터 정비 운영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2〉 일본 정주자립권 추진방향

1)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형성 방침 참고(나가하마시 홈페이지, <http://www.city.nagahama.shiga.jp>)
 2) 나가하마시 기획부 기획정책과 차장, 나카타 시게키, 국제교류단체 시민공동추진과 나카지마 총 3명

■ 인터뷰 주요 내용²⁾

● 정주자립권 형성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 또한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인접한 동경, 오사카, 나고야 등 인근 대도시 주민의 유입을 확대하고, 나가하마시 인구 유출의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중심 시인 나가하마시를 중심으로 주변 6개 마을이 합병하여 하나의 시로 통합하였다. 사업의 추진시 중심지와 주변 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연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3대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대 분야 사업은 1) 생활기능의 강화, 2)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 3) 권역 관리 능력 강화이다.

산업과 관련하여 시 급의 작은 지역에서의 산업 정책은 어려운 점이 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목표로 관광 객 집객을 위한 사업이 주요 사업이며, 나가하마 지역은 유리공예가 유명하다.

● 정주자립권과 관련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절차는 어떠한가?

: 먼저 행정기관에서 전체 사업을 구상하여 주민들에게 건의하고, 건의된 사업들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되는 절차를 거친다. 실제로 지역 내 병원이 3개가 있었으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나가하마시가 이를 재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보완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병원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주자립권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참여와 규제 수준은 어떠한가?

: 정주자립권마다 각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제안서를 검토·승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다.

● 정주자립권의 주요 목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지원금으로 보조금을 활용한 직접적인 인구 유입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 정책의 결과가 인구 유입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보육과 관련한 정책, 아이들을 쉽게 맡길 수 있는 레스토랑, 보육원, 탁아소, 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기존 빈집 활용방안과 운영, 관리 방식은 어떠한가?

: 빈집은 리모델링 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호텔, 여관 등 여행자들의 숙박시설로 운영되기도 하고, 유리 공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빈집의 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일률적인 임대료 계약 형태는 아니다. 운영과 관리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기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구를 통해 시설 운전자, 임대료 등 결정된다.



- 정주자립권 정책 추진 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 나가하마시와 6개 마을 간 합병으로 7개 지역 대표가 생기게 되어 대표 간 주도권 문제 등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역 공동의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 나가하마시 정주자립권 정책 및 사업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평가는 어떠한가?
 : 중앙정부(총무성)에서의 평가계획은 없다. 그러나 나가하마시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보완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상점가 활성화 정책으로 유명한 나가하마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 우선 계획의 수립과 수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나가하마시 주도로 10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소상공회의소, 주민, 기업, 나가하마시 공무원 등이 모여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 나가하마 중심시가지 상점가 이용 수요 타깃은 누구인가?
 : 현재 나가하마시에 많은 마트들이 있으며 주민들은 대부분은 지역 주변의 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중심권역의 상점가는 주로 관광객이 이용하며 주요 타깃도 관광객이다. 따라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관광객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나가하마 정주자립권 비전 계획상의 산업 계획의 추진 사항은 어떠한가?
 ; 앞서 잠시 얘기하였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산업정책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객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인력 수급과 관련한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가하마시와 6개 마을 간 합병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체계는 어떠한가?
 : 주요 교통축은 민간전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역 곳곳으로 작은 버스와 택시로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역사와 정거장 운영은 시가 담당하고 있다.
- 향후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 관광객을 위한 시설 개발로 많은 관광객 유치이다. 이러한 사업과 정책방향으로 중심시가지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림 3〉 나가하마시 위치도



〈그림 4〉 중심상점가 리모델링 사례



〈그림 5〉 중심상점가 리모델링 사례



〈그림 6〉 중심상점가 리모델링 사례



〈그림 7〉 상가 리모델링 사례



〈그림 8〉 상가 리모델링 사례



■ 시사점

일본의 85개 정주자립권 중 나가하마시의 사례는 다른 지역과 다른 의미가 있다. 가장 큰 의미는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구역의 통합이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체계의 일원화 또는 시군별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주민과 행정의 협력적인 사업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이나 주민이 사업을 함께 제안·검토하고 계획화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주도형, 현장밀착형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간 주민 간 협의와 논의를 할 수 있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하나의 사업 추진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중기적인 계획 추진으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생활권으로서 필요한 분야의 사업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공급시 시설 간 집중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지역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정책의 기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심지가 내의 상점가들 개발 시 외부 방문객들을 타깃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산업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권 계획과 일본의 정주자립권 계획은 비슷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차이는 생활권별 단편적인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기 위하여 우선 지역들의 자발적인 공동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있다. ◀



갈등관리와 인정조정관 제도

정창화 _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I. 갈등관리를 위한 인정조정인의 필요성

오늘날 국가 및 사회의 다원화가 고도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다양성도 매우 분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국가의 정책 참여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democracy)의 핵심이 국민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은 대외적인 국가경쟁력의 쇠퇴는 물론이고 미래적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국가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노무현 정부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은 계속되었다. 4대강사업,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은 국가적 차원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대립,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환경갈등, 종교적 갈등,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갈등 그리고 시민사회의 분열 등 총체적으로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얽혀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정정화, 2011: 2).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1월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여 소송 일변도의 분쟁해결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조정절차를 관할하는 조



정인의 역할은 법관이 재판절차에서의 진행하는 역할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정인으로는 교수, 각계전문가, 사회명망가, 변호사 등이 선발되고 있지만, 조정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없이 조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함영주·서성운, 2014: 53).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정인 교육 및 훈련과 이에 합당한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정조정인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II. 공공갈등 개요

1. 공공갈등의 개념

갈등(conflict)의 어원은 라틴어의 ‘confligere’에서 유래하며, 그 의미는 ‘서로 충돌(Aneinanderschlagen)하다’ 또는 ‘상호 격돌(Zusammenstoßen)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적어도 2인 이상의 집합체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넘어서 심리적·물리적인 충돌 및 격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은 또한 공공영역(public sphere)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즉, ‘공공정책 또는 공공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상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인 것이다. 이때 ‘공공영역’은 제도적이거나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공의 특성을 넘어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충분히 담론과정에 서도 설정되어질 수 있는 포괄영역으로 볼 수 있다, 공사 영역을 포괄하여, 갈등이 사적 문제로서 발생·해소되는 범위를 넘어 공공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를 공공갈등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정용덕, 2010: 4).

이러한 공공갈등의 개념에 대한 광의의 접근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또는 정책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으로 한정하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공갈등은 사회내의 집단, 계층, 개인, 계급, 세대, 지역 등을 포함하는 사회의 구성원의 가치관 또는 직·간접의 이익과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공공갈등의 특징

공공갈등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갈등보다 해결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많이 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로는 공공갈등의 원인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예측 불확실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이나 사업수행시 이에 따른 직·간접적 혜택 등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밖의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 문제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찬성-반대-방관적 집단 등이 생겨난다는 점, 초기의 정책 목표 설정이 예상 밖의 정책 문제를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어 여러 가지 규제가 개입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김태기, 2005: 101-102, 김용수·정창화, 2015: 136).





공공갈등의 유형은 갈등의 당사자인 갈등주체, 갈등내용, 갈등성격 그리고 갈등표출 여부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갈등의 내용에 따라 공공갈등이 유형화될 수 있다(이용훈, 2013: 4).

〈표 1〉 갈등분야 및 내용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자치단체	정수장명	비고
지방행정 지방재정 분야	지방행정	조직, 인사, 행정구역, 권한, 기능배분 등
	지방재정	관리, 과세, 재정 등
지역개발 분야	협오시설	하수·분뇨처리시설, 쓰리기 처리시설, 사회복지시설, 위험·기피시설 등
	도로 및 광역공급시설	도로개설, 철도, 기타 교통시설, 광역상수 등
	하천	수질보전, 댐건설 및 관리
	지역개발사업관련시설	민간개발사업시설,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시설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

여기에 이러한 공공갈등 및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①협상, ②중재, ③갈등회피, ④비공식적 토론, ⑤입법결정, ⑥사법결정(재판), ⑧재정, ⑦행정결정, ⑨폭력, ⑩비폭력적 직접행동 등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갈등해결방법으로 주로 사법결정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경우 분쟁해결방법으로 사법결정보다는 조정 또는 중재 등의 대체적 갈등 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 선호되고 있다(임동진, 2012: 3).

ADR은 전통적인 갈등관리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갈등방식으로서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소위 비사법적 갈등해결방법이다. ADR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그리고 협상(negotiation) 등의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조정은 제3자에게 절차를 위탁하고 당사자가 결과를 통제하는 방식이다(이용훈, 2013: 5).

III. 갈등관리를 위한 조정인 제도

1. 한국

우리나라의 조정의 역사는 지난 1987년 대법원이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예규’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민사조정 및 가상조정과 같은 법원조정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법원조정센터의 설치 그리고 조기조정제도의 도입 등으로 법원조정은 다소 활성화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



재 30여개 기관에 이르고 있는 행정형 ADR기관의 조정은 10%정도의 조정기관 만이 활성화 되어있고, 대다수의 기관의 활동성은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김상찬, 2015: 196).

법률적 측면에서, 행정형 ADR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부재하고, 개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행정형 ADR은 행정부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된 갈등 및 분쟁해결기구로서 알선조정중재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구는 분야별로 정부와 민간간 또는 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고, 민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정화, 2102: 12).

조정인의 전문성 및 조정효력 측면에서, 행정형 ADR 기관의 조정위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법조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기술과 협상설계 및 ADR설계 등 대인관계능력 및 조정절차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미흡하다. 특히,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gerichtlicher Vergleich)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위원회도 존재한다. 그러나 행정형 ADR기관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 조정기관의 중립성 그리고 신뢰성이 소송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되어야 함이 전제되고 있다(정정화, 2102: 13). 여기에 전문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자격을 지닌 전문 조정인의 양성은 공공분야의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2. 일본

일본의 지난 2004년 12월에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ADR법)을 제정하여 ADR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6월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설치이후, 그 산하에 ADR검토회를 신설하여 장기간 ADR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ADR법에 따라 민간형 ADR기관의 육성 또는 ADR기관 설립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ADR절차실시자의 육성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국 분쟁해결의 핵심요소가 전문 조정인(mediator)의 양성 및 ADR기관의 확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찬, 2015: 186).

조정인에 대한 육성과 관련하여, 지난 1974년 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조정인의 전문성을 고려했지만,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 왜냐하면, 조정인은 소위 덕망가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물로서 간주되었다. 조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조정기법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4년에 제정된 ‘ADR법’을 통하여 조정인 육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이다(김상찬, 2015: 187-188).

3. 독일

독일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의 핵심제도 구축은 지난 2012년 「조정 및 기타 비사법적 갈등해결절차



촉진법(이하, 독일조정촉진법), 2012」(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und anderer Verfahren der auß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조정촉진법의 배경은 유럽연합(EU)의 조정지침에 근거한다. 지난 2008년 유럽연합(EU)은 역내 회원국에서 ADR 제도의 올바른 인식과 활용 및 조정제도 활성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EU 조정지침(Directive 2008/52)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조정은 '촉진적이고, 이익에 기반한 과정'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조정인은 분쟁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주제 및 의제를 정의하고 협상 및 협조 과정을 이끌며 최종적으로는 이익에 기반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중립적인 촉진자로 보고 있다(김용수·정창화, 2015: 146-147).

독일에서 ADR은 일반적으로 중재와 조정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소(Schiedsamt)와 중재심판(Schiedsgericht)의 중재로 세분되며, 조정에는 일반 또는 인정조정인(Zertifizierte-Mediator)의 조정과 법원조정(Güterichter)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법원조정인 경우 결정의 성격은 화해(Vergleich)로 결정되며, 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 합의의 형식으로 결정된다(김석수, 2015: 4).

IV. 인정조정인의 제도적 착근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1. 인정조정인의 제도화 과정

독일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제도로써 인정조정인(Zertifizierter Mediator) 제도는 상기한 2012년 「독일조정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und anderer Verfahren der auß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인정조정관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08년 유럽연합의 조정지침(Directive 2008/52)¹⁾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조정인의 제도화 과정은 지난 1980년대 초까지 소급된다. 즉, 학계에서 순수 학문적 차원의 논의가 1985년 시점을 중심으로 조정과 조정정책에 대한 관련 협회 및 조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어 1990년대 중반이후 조정(Mediation)의 실무영역에서도 그 적용이 증가하였다(김용수·정창화, 2015: 143).

1) 소위 'EU 조정지침'이라는 불리는 지침의 원명을 다음과 같다: 민사·상사 분쟁에 대한 조정지침(Directive 2008/52/EC, The Europe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표 2〉 독일 조정(Mediation)의 제도화 과정

조정의 제도화 시기	조정의 제도화 과정
1980년 초까지	학계에서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
1985년	가족 중재 및 피해자 가해자 중재시 우선적 조정프로젝트 실행
	조정과 조정정책 관련 협회 및 조직이 급격하게 성장. 실무적용은 미흡
1990년대 중반	조정의 실무적용 증가 (주로 피해자-가해자중재 및 가족조정).
	회의 및 조정교육뿐만 아니라 출판물의 과다
1991년, 1994년, 1999년	피해자-가해자 분쟁해결/조정의 명문화화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2000년-2002년	민사사건에서 ADR을 명문화한 민사소송법의 개정
2007년 2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BVR 1351/01)"법치국가에서 재판에 의해 소송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당사자 상호간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선호될 수 있다"
2007년 4월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중재법의 초안 작성(주정부 선거결과 주정부 교체로 법제정 실패)
2008년	2008년 7월 1일 법률서비스개정법(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dienstleistungsrechts)에 따라 "조정(Mediation)은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가 아님"을 선언
2011년 1월	연방 조정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초안 작성
2011년 12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연방조정촉진법 가결
2012년 7월	「조정 및 기타 비사법적 갈등해결을 위한 촉진법, 2012」 (Gesetz zur Förderung der Mediation und anderer Verfahren der außergerichtlichen Konfliktbeilegung) 제정

출처: Trenzcek & Loode(2012), pp.64-65/일부 수정함, 김용수 · 정창화(2015), p. 143에서 재인용

2. 독일 인정조정인의 제도의 특징

독일의 조정인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제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독일조정촉진법」 상의 특징이다. 즉, 독일에서 조정은 법관, 조정인, 또는 함께 하는 공동조정(co-mediation) 등 형태가 다양하며, 또한 조정은 향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들어 조정의 유형을 한정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김용수 · 정창화, 2015: 143). 또한 ADR을 수행할 수 있는 조정인에 대하여 단일한 직업적 배경을 설정하지 않는다. 법조인만이 조정인이 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하고, 다양한 전공자에 의한 인정조정인을 양성하고 있다.

둘째, 인정조정인 양성에 대한 구체성이다. 「독일조정촉진법」에서는 조정인 양성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정인의 교육과 연수의무 및 인증조정인 제도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법에서는 조정인을 '일반 조정인'과 '인증 조정인'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조정인의 의사소통기술 및 분쟁대처능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이것은 인정조정인에게 조정의 기본원칙, 절차, 분쟁 구도, 법의 역할 등의 기본 내용과 인간 심리과학, 의사소통 방식 및 기술 그리고 실습의 과정 등 다방면의 학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정조정인 교육에 대한 강화이다. 독일의 경우, 법관이나 변호사라고 하여 당연히 조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조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기법, 의사소통 기술 등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함영주·서성운, 2014: 71). 일반적으로 조정실습을 포함하여, 총 200시간의 수업 및 훈련이수가 전제되고 있다.

3. 한국적 시사점

우리나라에 인정조정인 제도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분쟁해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비사법적 해결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가 해결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당사자간 공동합의에 의해 채택되는 것이다. 조정인은 법원의 판사와는 달리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조정이 당사자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조정인 교육 및 인증과정의 제도화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의 단일화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 조정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자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에 대한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노력과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국가 주관의 공식시험을 통하여 갈등조정전문가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대학의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동등 자격을 획득하면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은재호·윤광석, 2009: 111; 김용수·정창화, 2015: 153).

마지막으로 ADR과 연계된 인정조정인의 역할과 결정범위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의 경우, ADR의 효력에 대해 ADR촉진법 입법과정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는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전자는 ADR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DR에 의한 화해(Vergleich)의 집행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후자의 경우, ADR에는 화해(Vergleich) 집행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ADR에 의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정정화, 2012: 12). 독일의 경우에는 법원조정의 경우에는 화해(Vergleich)의 집행력을 부여하지만, 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 합의에 이른다. 향후 인정조정관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효력에 대한 논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2015),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안건(의안번호: 제 2015-106호).

김태기(2005), "갈등해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공갈등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3권 제2호, pp. 97-124.

김수석(2015), "독일의 갈등관리제도 조사: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갈등해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공갈등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3권 제2호, pp. 97-124.

김상찬(2015), 일본의 조정인 양성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59권, pp. 185-204.

김용수 · 정창화(2015), 독일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 - 공공갈등 조정관(Mediator)의 제도적 착근 탐색,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5권 제1호, pp. 131-160.

은재호 · 윤광석(2009), "갈등조정전문가 인증제의 제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FA연구보고서 2009-27.

이용훈(2013),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1호, pp.1-26.

임동진(2012),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선주(2012), "2012년 독일 조정법의 내용과 평가", 『민사소송』, 16(2), pp.411-453.

정정화(201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공공갈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2012), pp. 1-27.

정정화(2012),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26권 제2호. (2012), pp. 1-22.

함영주 · 서성운(2014), "조정인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6권 제1호, pp. 53-96.

인터넷 자료 : <https://www.mediationaktuell.de/news/synopse-ausbildungsregelungen-aller-grossen-dach-verbaende-und-vergleich-neuen> (2016년 1월 30일)

Behrens, Martin(2014), Conflict Resolution in Germany, in: The Oxford Handbook of Conflict Management in Organization, Oxford University, pp.363-384

Thomas Trenczek · Serge Loode(2012), "Mediation 'made in Germany': a quality product".





충남 경제비전에 거는 기대



오정연
대전일보 기자

유독 늦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2016년 겨울이 서서히 봄에게 자리를 내주는 3월이 됐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대전에서 충남도 내포신포시로 생활의 터전을 옮긴 지도 어느덧 3개월을 넘기며 내포신도시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면 폭설과 한파로 온통 눈 받이었던 내포 신도시와 주변 지역 일원도 보다 생동감 넘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감에 부풀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신참 이주민으로서 가장 먼저 품었던 궁금함은 자동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병풍 같은 산자락 아래 보이는 소박한 농촌의 풍경과 공사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신도시, 지난 겨울 한파에 뱃길이 끊겨 고생이 많았던 바다와 섬 지역까지 그 거리와 경치만큼이나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충남 전 지역을 어떻게 한 가지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비책이 있기는 있을까 하는 점이였다.

이에 대한 답을 찾던 중 충남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충남경제비전 2030'을 유심히 보게 됐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차세대 성장산업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깨끗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만 보거나 '충남경제비전 2030'이라고 하면 다소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앞에 붙어 있는 '골고루 함께 웃는 경제'라는 말에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연초에 열린 지역정책포럼에서 이에 대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생겼다.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산업단지 전략이나 성장동력전략을 포함한 경제산업비전의 핵심에 자연생태가치의 향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일 법한 경제비전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연생태가치 향상이나 환경정비 같은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언뜻 안 어울리는 그림 같기도 하고 비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앞서가는 느낌과 괴리가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자동차 산업과 함께 몰락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를 보며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밀식형 축사를 짓듯 제조업체, 공장을 유치하면 해당 제조업의 몰락과 함께 기업의 기반도 무너져 버린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우리 지역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금보다 키워냄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클린 충남운동이나 깨끗한 충남 만들기 같은, 하천 정비부터 시작되는 환경 관련 사업이 결국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가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말아들을 공부 많이 시켰으면 (말아들이) 동생들도 챙겨야 한다'고 표현했다. 산업화 시대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앞장서서 발전가도를 달렸던 산업분야가 이제는 정체되어 있는 농업 등 다른 산업분야와 함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을 '어깨동무할 수 있게 자꾸 걸쳐줘야 한다'는 것이 '골고루 함께 웃는 경제'의 핵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같은 생각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존 충남도의 6차 산업 전략에 반영되었다면 올 한해 충남도는 이를 넘어 IoT(사물인터넷)을 위시한 IT 분야 등 신산업 분야까지 시야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에 방문했던 안 지사는 결국 지역 발전의 핵심은 그 비전이 인터넷 시대와 어울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다며 충남 지역과 지역상품이 이에 맞춰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했다. 도의 1차, 2차 산업의 중심에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농업과 IT의 접목에 성공해 화제를 모으는 사례가 하나둘 쏟아지면 농업을 보는 기존의 시선까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유유히 충남을 감고 흐르는 급강 같은 차분하고 여유있는 충청의 정서가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새로운 것과의 접목에 필요한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강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

“새해, 새로운 도정으로 새 시대 선도하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월 14일 “2016년 새로운 도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자”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도는 그동안 3대 혁신과 3대 행복과제를 중심으로 법정·비법정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일과 생각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 변화를 꾀해 왔다”며 “그 결과 충남도정은 도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는 많은 영역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해왔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통해 도는 신균형발전 전략과 3농혁신,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거리 병산 차등적 전기요금제, 유역별 물 통합관리 체제 등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3대 혁신과 3대 행복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6년 동안 세워 온 수백 개의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실천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올 한 해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한 대응을 하는 것,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는 성과주의에 빠지지 말자”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쟁겨 나아가자. 날마다 새롭게 시도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새롭게 하자는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 대해 주저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 핵심은 민주주의 원칙과 철학에 있다”고 못 박았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우리 사회 운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체제이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모두의 창의력을 촉발하며,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민주주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철학이고,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이라며 “늘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체전·장애인체전 홈페이지 문 활짝

충남도는 오는 10월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2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전국체전(<http://2016sports.chungnam.net>)과 전국장애인체전(<http://2016sportsp.chungnam.net>) 홈페이지는 대회 개요와 준비과정, 경기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문화체전'으로 이번 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충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충남스토리', 관광지 소개, 맛집 정보 등도 담았다.

두 홈페이지는 특히 모바일 시대에 맞게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 스마트기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대회 전까지 각종 SNS 이벤트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전이 막을 올린 이후에는 경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에 새롭게 개편해 운영하며, '체전 리포터'를 활용해 주요 경기 실시간 중계, 경기장 및 주변 관광지 홍보 등도 진행한다.

한편 10월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장애인체전은 아산시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 112개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선수와 임원 등 4만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기업·단체 앞장선다

충남도 내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 확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와 임동규 충남새마을회장,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명진 총괄공장장을 비롯한 11개 기업 본부장·공장장 등은 1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깨끗한 충남 만들기'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도와 이들 단체·기업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깨끗한 자연환경이 경쟁력이라는데 뜻을 같이한 뒤, 도정 핵심과제로 정하고 시·군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노력해 온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더욱 확산

시켜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회적 역량 강화,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참여 단체·기업들은 이와 함께 각자의 현실에 맞게 실천과제를 설정·추진할 계획으로, 충남새마을회는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을 펼친다.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인근마을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고, LG화학 대산공장은 인근 도로 청소 등을, 부여 KGC인삼공사 고려인삼창은 백마

충남소식



강변 정화활동 등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아름다운 해변길 만들기를 추진한다.

부여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는 염장천을 대상으로 쓰레기 없는 실개천 만들기 사업을 펼치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는 생명의 바다 가꾸기 사업을, 서산 한화토탈은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사업을 실시한다.

서산 현대오일뱅크는 다시 찾고 싶은 화곡저수지 둘레기 조성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글로벌 애코 리더 환경캠프 등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회사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충청투데이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기획보도를 펼치기로 했다.

도와 단체·기업 등은 이번 공동선언이 지속적인 실천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실천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번 공동선언은 모두가 함께 더 깨끗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

한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 충남 만들기 운동은 '깨끗한 충남'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자 관광 충남의 경쟁력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해 6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시·군 특화사업 선정과 환경정비 협업, 불법쓰레기 특별단속, 환경순찰단 구성·운영, 시·군과의 협약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청소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 '내 주변 청결 인증 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44개 개별 사업에 36억 원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주민 선도시책 발굴·시행,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롤모델 마련 사업 추진, 환경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쓰레기 처리 활성화 시스템 등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대산-당진고속도로가 마침내 뚫린다.

도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업, 지역 정치권 등의 전방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도는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월 3일 밝혔다.

대산-당진고속도로는 이번 예타에서 경제성(B/C, 비용대비 편익)이 1.0으로 평가돼 기준(1.0 이상)을 충족했다.

정책적 평가(AHP) 역시 0.536으로 기준점인 0.5를 넘어섰다.

사업성과 정책성 모두 인정받으며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사업비는 6502억 원으로, 모두 국비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대산-당진고속도로는 빠르면 내년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오는 2022년쯤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산-당진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부터 당진시 용연동 서해안고속도로 남당진 분기점까지 24.3km(4차선)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산항 물동량은 지난 2008년 6099톤에서 2014년 7851톤으로 29% 증가하며,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류(위험) 화물 처리량은 전국 4위이며, 입항 선박은 2008년 5898척에서 2013년 7049척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화물량은 5톤 트럭 기준으로 2008년 27834대에

서 2015년 31만 3908대로 7년 새 8.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 대산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산단지에서 당진IC까지 40km에 달하던 이동거리는 24.3km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이동 시간 역시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간 절감 예상 비용은 운행비용 93억 원, 통행비용은 447억 원,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 64억 원, 환경비용 20억 원 등이다.

박재현 도 건설교통국장은 “대산항은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물동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산단지는 연간 국가예산의 1%가 넘는 4조 원가량의 국세를 납부하는 국가 발전의 견인차와도 같다”며 “이번 예타 통과는 국가 균형발전과 대산항·대산단지의 국가 기여도, 기업 물류비용 절감 등의 기대효과와 함께, 도와 서산시, 지역 정치권 등 각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중심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될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2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공로 인정 —

충남도가 지난해 제정된 도 조례에 대한 합법성 등을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조례상' 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된다.

올해 도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총 104개의 조례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조례에 선정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총 36건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의회의 조례심의권을 보장

하기 위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임위 별로 4개로 분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의 조례안으로 상정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는 도 조례의 법률적합성 확보는 물론,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도는 이번 일괄개정조례가 조례개정의 범위를 기존 개별에서 다수로 넓힌 점에서 타 시·도에서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치조례 우수기관 수상의 위상에 걸맞게 올해 자치입법 수요를 조사하고 특정 계열에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조정해 2016년 자치입법 지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입법수요에 적극 대응해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충남 2040 미래연구서' 펴낸다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CNI)은 올해 '충남 2040 미래연구서' 를 펴낸다고 밝혔다.

'충남 2040 미래연구서' (이하 '미래연구서')는 도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충남의 미래를 설정하되,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보다 '사람', '삶터', '일(자리)', '돌봄' 등을 중심축으로 충남의 미래를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번 미래연구서 출판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 기획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출간프로젝트 간사인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홍원표 박사는 "현재 지구촌은 기후변화, 글로벌화, 권력분산, 스마트화 등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삶의 질 중시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과거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일변도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책

의 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미래연구서는 제1권 '충남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제2권 '충남 2040 미래를 그린다' 등 총2권으로 구성되며, 각각 오는 6월과 11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1월 13일 연구원에서 미래연구서 제1권 집필을 위한 첫 집필진회의를 갖고 본격 원고 작성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집필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주제별 토론 시간을 가졌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그간 충남의 부문별 미래연구는 있었으나 충남의 중장기 미래에 대한 융·복합적 연구가 미흡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미래연구서는 지역정책연구기관, 지역 대학,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충남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정책개발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권으로 읽는 '심훈'의 모든 것! 충남연구원, 심훈 3남 심재호가 쓴 <심훈을 찾아서> 발간

2014년 9월 심훈(1901~1936)의 기념관이 그의 소설 상록수의 산실인 당진에 마련됐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8년 만에 들어선 심훈기념관은 저항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고 예술인이었던 삶의 여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심훈 기념관을 건립하기까지 그의 3남인 심재호의 역할이 컸다. 그는 50여 년간 아버지 심훈의 유

물과 친필, 영화 각본을 찾아다녔다. 일제 총독부가 새빨간 연필로 검열한 시집 <그날이 오면> 등 아버지가 남긴 4천여 점의 원고 사본을 기념관에 내놓았고, 아버지의 유해를 <상록수>를 집필했던 기념관 근처 '필경사' 옆에 안장했다.

심재호가 아버지 심훈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심훈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 과정을 기록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바로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이 '충남재발견' 시리즈 제1호로 기획해 최근 발간한 '심훈을 찾아서'(도서출판 문화의 힘, 265쪽, 1만 4000원)이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충남재발견' 시리즈 출간을 통해 그동안 덜 알려졌던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환경 등 우수한 자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사진으로 보는 심훈'이다. 일제 검열로 만신창이가 된 '출판 불허' 도장이 찍힌 '그날의 오면' 검열판과 심훈의 서대전 감옥 수감기록,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당진시 부곡리 '공동경작회' 회원들의 얼굴 등 수십 점의 귀한 사진을 한데 모았다.

2부 '심훈을 찾아서'는 김태현 순천향대 교수(문학평론가)가 쓴 '심훈 일대기'로 시작된다. 2부 1장에는 '심훈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충남 당진과 주변 필경사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필경사는 1935년 소설 상록수와 아들 심재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함께 수록된 권영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문학평론가)는 <심훈 시집 '그날의 오면'의 친필 원고들>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 자료들이야말로 한국 현대문학 최대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어떤 작가나 시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친필 원고를 고스란히 보존해 온 경우가 없다. 이 자료들을 잘 지켜오신 심재호 선생께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한편, 지금의 영농조합에 해당하는 <공동경작회>(소설 상록수 실제 모델)의 사업내용과 세세한 기

역을 모아놓은 것도 이채롭다.

2부 2장에는 아들 심재호가 아끼는 아버지 심훈의 작품을 엄선해 실었다. 시는 <거리의 봄> <고루의 삼경> <동우> 3편이다. 편지글인 <감옥에서 어머니께 올린 글월>도 실었다. 이 밖에 수필 당진 앞바다의 소화가 들어 있는 <7월의 바다>를 비롯해 <단체와 우당1> <나의 아호 나의 이명>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나의 아호 나의 이명>에는 심훈이 본명인 심대섭에서 심훈을 쓰게 된 배경과 아호로 '백랑'(白浪)을 사용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부 3장은 자의 반 타의 반 '또 다른 심훈'으로 불리는 심재호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미주동포신문 <일간뉴욕> 편집국장 겸 발행인, 카터재단의 국제분쟁조정기구(INN) 창립회원을 역임했다. 특히 '뉴욕 이산가족 찾기 후원회'를 조직해 북한을 20여 차례 방문, 1천여 명의 남북 해외 이산가족을 찾아줬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이 책은 충남이 낳은 심훈 선생과 얼마 전 개관한 심훈 기념관의 역사를 그의 아들을 통해 듣는 한 권으로 보는 심훈 보고서이자 심훈 기념관 안내서"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 재발견' 시리즈에 걸맞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충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도내 농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이사장 이윤기)와 2월 15일 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6차산업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협동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인적, 물적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협약내용을 자세히 보면 △6차산업화 및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사업 추진 △농어촌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과 6차산업화 창업 지원 △6차산

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학술·교육·연구조사의 공동 추진 △농촌 및 지역 산업체의 비즈니스 역량 컨설팅 △윤리적 소비 촉진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계몽활동 등을 담고 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이미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충남지역 농업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모집

www.cni.re.kr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 코너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작성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보내실곳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부
전화 (041)840-1123 팩스 (041)840-1129
E-mail : cdipr@cni.re.kr

